

第289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2010年4月9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附議된案件

-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 1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4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의장 김형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사망, 실종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세계 제1 조선 강국과 IT 강국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심 30m~40m에 있는, 절규하고 있는 생존자들과 선체를 찾는 데 이틀이나 걸려야 했고 그것도 고기 때를 발견하는 어선 탐지기가 찾아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

습니다.

가족들의 가슴들은 다 타들어 갔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어 답을 내놓는 식인데다가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달라지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능입니까? 아니면 은폐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고백할 수 없는 실책이라도 있습니까?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정확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진상규명특위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입니다.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 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침몰사고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온갖 국정현안을 두고 정부 여당은 국민 여론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정당에서는 4대강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학계를 넘어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가 나서 4대강 사업의 위험천만함

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 정부 여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왜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적 신뢰는 소통에 기반 해야 합니다. 온통 가리고 덮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에서 소통이 받을 불일 곳이 없습니다. 국민과 불통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다 수상과 회담에서 독도 문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주권의 문제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만 키우고 정정보도 청구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또 다시 좌파집권 10년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스스로도 민망한 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부 여당은 두려울 게 없는 듯합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권력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밝힌 조인트 폭행사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만 정부 여당은 조금도 주춤거리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KBS 사장 해임, YTN 기자 해고에 이어 MBC 전체를 겨냥하며 아예 방송 장악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권의 MBC 직할통치체제의 완성’이라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언론 장악에 이어 사법 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봉은사 운영과 관련된 외압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다 싶으면 좌파 운운하

며 재갈을 물리고 내쫓으려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언론 학계 종교계 사법부에 이어 문화예술계까지 좌파척결을 주장하면서 권력의 남용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반전교조 좌파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국정 철학이 좌파척결입니까? 좌파교사 좌파주지 좌파판사 좌파언론 등 이른바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사독재시절에나 써먹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무기를 다시 쓰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당장 중단하십시오.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독재입니다.

정부 여당이 좌파척결을 고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서민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방송 장악 등은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매정하고 혹독한 이명박 정부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한숨짓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자 감세, 4대강 사업에 91조·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요구에는 왕따급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 명을 증징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기초해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법으로 매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상 초유로 설립 신고를 두 차례나 거부하며 노조 설립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교사의 양심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일삼더니 압수 수색, 대규모 예금 계좌 및 이메일 압수 등 사상 초유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노동운동 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 약속은 잊혀진 지 오래고, 농민의 절망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로 치닫는 쌀값 폭락 사태는 중단된 대북 지원을 재개하면 한숨 놓을 일인데도 이 정부에서는 그토록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여당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을 찾아가면 “SSM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하에서 노동자, 서민, 농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민의 생계를 돌보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이미 400만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은 미래 세대인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소득은 20% 줄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하게 심화·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특히 서민 살림살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재벌대기업, 부유층 퍼주기 경제철학과 힘센 쪽으로 밀어 주자는 양극화 경제철학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 호주머니를 채워 주기 위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떠받치는 데 매달려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핑계로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부동산 재벌들의 호주머니만을 생각한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야 정답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수단으로 환율정책이 이용돼선 안 됩니다. 그래야만 내수가 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살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따라서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100조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은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투기 열풍을 부르고 있는 과잉유동성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국면에서 초저금리는 실물경제 회복에 아무런 공헌을 하고 있지 않으며,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 거품을 유지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부유층이 투기 이득을 챙기는 동안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고 있는 소리가 이명박 정부는 들리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책을 바꿔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고용이 늘어야만 민생이 안정됩니다. 이제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친저소득취약계층 정책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복지와 결합된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재앙으로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통해 출로를 열어 주고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다른 한편의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한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습니다.

넷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해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친중소기업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대기업, 금융업, 대형건설업 중심으로 경도된 국가예산 편중 지원을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상 초유의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욕심이 있다면 그것마저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야권연대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지방자치의 꿈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임하

겠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어도 되는 동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학교,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경쟁과 차별에 시름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 새로운 지방자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온 마음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정권 의원의 소개로 경남 김해시 시민단체대표 56인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또 오제세 의원의 소개로 충북 청주시 충북고등학교 학생 65인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25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5월 위기설이다, 도미노 부도설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언론에서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최근 2일 시공능력 35위 되는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좀 과장됐다고 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또 미분양이 적체돼서 특히 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

로 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권 의원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3월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정책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것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동안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턴키제도 개선이라든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등 일부는 좀 했습니다마는 역시 업계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좀 어렵고 또 정부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건설산업 선진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지금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는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잘 안 되고 또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증가되고 따라서 또 자금사정이 생기면서 가중되고 있는데 올해 1/4분기 공동주택 매매는 작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1만 9000호입니다. 여기에 잠겨 있는 돈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정부에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했기 때문에 4만호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지난월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동안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고요. 이번에 또 의원님 말씀대로 양도세 감면 시한도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리츠펀드를 통해서 사들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권 의원 그런데 이 분양가 인하 폭에 대

해서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현실적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 제도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마는 역시 업계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가 인하 등과 연계시켜서 이 제도를 하는 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독려하면서, 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현재 대기업들은 해외수주가 많고 또 공공 부문 수주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금이 아주 풍부합니다.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견 건설업체들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저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가지고 의무로 지역에 발주하는 그런 양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이 한 49% 정도 됩니다. 49% 정도 되는데 아직 발주 안 된 물량이 주로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 부분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현재의 지역업체들의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게 남아서 그렇다, 그게 되면 좀 관찮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김정권 의원**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도급하한 대상을 좀 확대하고 또 분할발주를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수주의 영역을 좀더 넓힐 필

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의 수주 영역 확대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든가 또 소속 산하기관 하도급 물량의 최소한 50% 정도를 지역업체에 배분하도록 저희가 지시한다든가, 4대강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를 분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고도의 공법이나 아주 중요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줘야 기술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결국 건설사들은 생존을 걸고 분양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경북 경산시의 대동 다숲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동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이 아파트가 건설사 부도로 환급이행에 들어갔는데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기관인,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1200세대 분양계약자 중에서 977세대에 대해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부도 이후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회사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 5월부터 브로커와 공모해서 446명의 차명계좌, 소위 말해서 바지계약자를 모집해서 불법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대주보는 차명계약자는 물론이고 이들과 무관한 임직원 계약 230세대 또 협력업체 계약 301세대까지 무더기로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장관님,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이 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은 비정상적인 분양이었기 때문에 환급 거절을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거절을 위해서는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보증약관에 명시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환급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인 제보라든가 또 내부문건, 검찰 수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좀 비정상적인 거다 하는 판단에서 대주보가 환급 거절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정권 의원**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정권 의원** 저는 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선 대주보가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중도금 무이자 분양계획을 보증심사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주보가 분양률 제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또 대동건설은 450세대를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분양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대주보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가 보증심사에서 올라갔고 당시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대주보가 사전에 협력업체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알고 있었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대주보가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알 수는 있었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이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시해 주시니까 우리 대주보에서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나 이런 데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대주보가 작성한 사업수지분석 및 분양률 예측자료는 대동건설이 제출한 사업성 검토안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임직원 및 협력업

체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비용을 그대로 원가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법정에서 이것은 대주보 측도 증인으로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대주보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계약자들은 계약금 출처를 증명하는 은행 입출금내역에 대해서 자신이 정상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주보는 이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양자 대면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건설사가 임의로 작성한 내부 문서 하나만 보고 정상적인 소명절차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명백히 이것은 심사상에 문제가 있다, 대주보의 직무 유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대주보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김정권 의원** 법정에서 인정을 해 놓고 왜 장관님이 엉터리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시를 해 주셨으니깐 다시 한번 살펴서 대주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2008년 5월 이후에 대동건설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모집하여서 불과 4~5개월 사이에 500건에 대한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에는 분양을 하지 못 해 가지고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 사이에 신규계약이 갑자기 500건이 늘어났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동건설로부터 계약 작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던 대주보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주보가 차명계약은 보증계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공문 하나만 보냈더라도 이 사기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재판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1심 이후에 항소하지 않을 테니……’ 하면서 재판으로, 소송으로 계약자들을 유도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1심에서 패소하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산이자 20%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재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려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주택보증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의 보증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이런 사항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문제는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보면서 정상, 비정상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대주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해야 될 대주보가 수백 명의 선의의 계약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 장관님,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김정권 의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관 경고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에게 사장님 해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정권 의원 조속히 이 사안이 마무리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1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호주에 이어서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권 의원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정권 의원 그러면서 조세정책의 기본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왜곡해서도 안 되는 것,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정권 의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계층별 가계수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정권 의원 상위 20%는 소득은 늘고 세금은 줄었습니다. 하위 20%는 소득은 줄고 세금은 늘었습니다.

결국 조세정책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부의 재분배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김 의원님께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득 상위 계층인 20% 계층의 세금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불황을 맞이해서 근로소득을 비롯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데 기인합니다. 또 하나는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에 따라서 기본적인 과세 대상인 과세소득이 감소를 하니까 소득세와 재산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감세 세율 인하에 따라서 일부 세금이 감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세만으로 20% 계층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음 하위 20% 계층은 기본적으로 따져 보면 소득 자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감세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요.

정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저번에 감세를 할 때도 하위 계층이 좀더 감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소득세율을 금년부터 인하할 때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폭을 25%를 인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표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까지는 3.8% 인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8800만 원 초과하는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일부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권 의원**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율 인하로 확대된 여유자금도 기업들의 신규 투자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느끼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조세 부담을 줄여 주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고용을 유발하는 것을,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세율을 조정할 때는 국제적인 세율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법인세율보다도 높게 우리가 법인세율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의 일탈을 초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세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 기업이 감세 효과를 봐서 만약에 내부유보가 많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감세에 따른 효과는 통상 경험칙으로 보면 최소한 2, 3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확대보다는 감세가 갖는 하나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면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작년 한 3/4분기 이후부터는 투자도 지금 상당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김정권 의원**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높다, 그런데 오히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R&D 투자라든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세 제도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추세라든지 걸음마하고도 맞추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미트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지난 연말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축소하였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회에 제안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거의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화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혜택을 누린 기업들을 분류해 보면 거의 80%가 대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누렸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라는 말 그대로 앞의 ‘임시’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제한된 시기 내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20년 이상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전환해서 신기술 사업이나 신성장동력 또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해 줍니다, 투자세액 공제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장관님 말씀대로 1980년도에 도입된, 한시적인 목적인데 이것이 기업의 보조금 성격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이 지금 악화되어 있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투자 유인책을 축소하는 것

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 지원은 계속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그런 무차별적인 데들로부터 기능별로,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세액 공제를 비롯해서 텍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R&D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우리가 지금 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 정책으로 선제 대응을 해서 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정권 의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도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수준이나 증가 속도가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또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외적으로는 채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에 따르는 재정의 건전성이 지난 2년간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3.8%입니다. OECD를 보면 지금 평균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더 건전하게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되고 있는 2009년부터 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금년에는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국가재정중기운용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10월 국회에 예산 제안할 때 같이 국회에도 제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 채무를 13년경에는 한 30%대 중반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하고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10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재정 적자를 축소해서 2013년 내지 14년에는 균형이 달성되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전성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감세 정책은 하후상박의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여유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적절한 투자의 유인책과 함께 조화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실질적인 동북아 경제 공동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동북아 해저터널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중일 간 증가하는 인적·물적 교류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김정권 의원** 이게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는 어디쯤 된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용역 중입니다.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권 의원** 동북아 해저터널은 굴곡의 역사를 뛰어넘어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각되어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서 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치·외교적 상황 또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권 의원** 다양한 각도에서 해저터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정권 의원** 총리께서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권 의원** IT, BT, 원전 수출 이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중국 13억 인구나 일본 1억 인구가 평생에 한번 한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소득자와 해외 비자 취득 유경험자 또 학생연수단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비자를 완화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김정권 의원** 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와 또 2012년에는 여수 엑스포, 이를 연계해서 양국 간의 비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는 고소득 중국 국민이나 수학여행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자 완화 조치는 취해 왔습니다.

○**김정권 의원** 이 중국인 비자 제도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초계함 침몰의 원인 규명을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고 결과의 분석에 따라서 잠재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수도 있고 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 비상대책반 운영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경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 비상 대책을 세우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무엇을 묻고 싶고 정부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경제입니다. 지난 10년여간 경제적인, 경기의 부침과 슬한 위기에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절대 지표들은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를 위한 이념 대립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제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방치한다면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체감하는 국격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에 묻고 싶고 정부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 그 답을 위해서 행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신상진 의원 소개로

성남시 중부초등학교 학생 113명이 잠시 방청석을 다녀갔다는 것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업적으로 칭송받고 있는 UAE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만, 이 질문에 앞서서 정운찬 총리께 짧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검찰이 당초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던 광영옥 씨 뇌물 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의혹을 들고 나온다는 데 대해서 지금 시중의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총리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봉균 의원 적절치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봉균 의원 생각은 했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개인적인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강봉균 의원 얘기, 말씀하시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강봉균 의원 다음에 원전 수출 계약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 우리가 원전 건설을 수주했는데 수주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수주 금액은 200억 불이고요. 그리고 향후 준공 이후 한전이 60년간 운영 계약을 딸 경우에 그에 따른 수주가 추가로 200억이 예상이 됩니다.

○강봉균 의원 좀 명백히 대답하세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우리가 UAE로부터 수주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200억 달러입니다.

○강봉균 의원 200억 달러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강봉균 의원 그런데 지난 월요일 여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47조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하여 에너지 수출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47조 규모는 바로 400억 불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봉균 의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이번 계약이 체결된 금액은 200억 달러고요. 또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하고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게 60년간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00억 불 추가로 기대된다……

○강봉균 의원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47조 규모의 원전공사를 수주하여……’ 지금 최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소 다 짓고 난 뒤에 그것도 한 60년 동안에 운영을 좀 도와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이 뭘 있을 수 있겠지요, 60년 동안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게 200억 불입니다.

○강봉균 의원 그것을 수주 규모에다 보태서 400억 불이라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좀 잘 하세요. 그래야지 여당 원내대표가 200억 불이라고 하는 수주 금액을 400억 불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풀리기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200억 달러는 추가로 수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예, 하여튼 이 정부가 불리하면 숨기고 또 유리하면 과잉 홍보를 서슴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이 200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이 성사되고 난 직후에 이 원전 수출의 주계약자인 한전이 총 수주 금액은 186억 불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 말이에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강봉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200억 불입니까, 186억 불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 계약 조건에 보면 사업 기간 중의 국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보상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경우에 한 200억 불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아니, 자꾸 얘기를 혼란스럽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계약 당시의 계약 금액은 한전이 공시한 186억 불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맞습니다.

○**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자꾸 혼란이 안 생기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거기에다 물가 보상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좋아요.

지금 한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던 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한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수주액 중 약 20억 불은 숙소를 짓고 사무소나 창고, 도로 이런 것을 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 지원 시설비다, 그러면 순수한 원전 건설비는 20억 불을 뺀 166억 불이 맞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의원님, 지금 원전 계약의 관행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노(爐)나 이렇게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원전 수주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UAE 측하고 계약할 때 구체적인 그 금액 내역은 공개치 않기로 약속한 사안 때문에 그 금액은 확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강봉균 의원** 아니,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 보니까 이 20억 불이 186억 불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들어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들어 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것은……

○**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86억 불 중에서 20억 불, 간접 지원 시설비, 도로 포장해 주고 하는 것 빼면 사실은 발전소 짓는 비용은 166억 불에 났다 이말이에요, 맞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고요. 통상

적으로 원전을 계약함에 있어서는 그런 간접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균 의원** 아 참,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봉균 의원** 아이고, 알았어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강봉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또 자료화면 2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전 수주 계약에는 건설비뿐이 아니고 초기 운영비 그다음에 연료 공급비, 핵연료지요. 이 세 가지 이행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초기 운영비나 핵연료 공급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고리 3·4호기를 짓고 있고 국내에서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건설하고 초기 오퍼레이션(operation), 시험운전을 하고 그리고 핵연료를 장착하면 장기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핵연료 장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게 원전 국제 입찰의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균 의원** 글썄,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UAE하고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강봉균 의원**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86억 불이라고 한전이 공시를 했는데 그 안에는 도로 포장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초기 운영비나 핵연료 공급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봉균 의원**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것은 국제 관행입니다.

○**강봉균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순수한 원전 건설비 뺀으로 남는 것은 160억 불이 될지 150억 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 보여 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좋아요.

지금 이 정부가 이 UAE 원전 수출이 새로운 국운을 여는 단군 이래의 쾌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드디어 아, 이 정부가

진짜 신성장동력 산업을 찾아냈구나 이렇게 안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 수출을 계속 늘려 가면 우리나라가 큰 돈을 벌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물 내용과는 달리 외국 언론들을 보면 한국이 과연 이번 UAE 원전사업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의문을 집약하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영문이고 위가 우리 번역한 건데 여기 밑에 영문을 보시면 ‘too good to be true’, 계약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UAE 원전수출이 도대체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좀더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와 경쟁을 벌였던 회사가 프랑스의 ‘아레바’사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봉균 의원** 여기는 360억 불로 입찰을 했어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강봉균 의원** 아니, 발표된 거예요, 자료에. 그건 최 장관한테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발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그다음에 한전의 186억 불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우리가 그만큼 원전을 아주 싸게 건설할 수 있다.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는다. 덤핑이 아니다’ 이렇게 역설을 해 왔단 말이에요.

자, 자료화면 4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말하는 국가별 원전 건설단가가 우리나라는 kW당 2300불이고 프랑스가 2900불이에요. 이걸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가가 우리가 186억 불인데 프랑스가 360억 불이니까 93%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랑스가 그렇게 공들여서 수주하려고 했던 UAE 원전입찰에서 아

주 무모하게 폭리를 취하려고 덤뻐다가 우리한테 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까만 프랑스의 ‘아레바’사는 정부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문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가 지금 여러 나라, 여러 군데에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국제경쟁 입찰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 5를 보시면, 맨 위에 오버나이트 이퍼시 코스트(overnight EPC cost)라는 게 나오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오버나이트 코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 10년 걸리는 원자력발전소를 하룻밤 사이에 다 지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나 금융비용이나 이게 없다, 제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바로 이 오버나이트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kW당 2900불 기준으로 1600MW 4기 공사비를 내면 185억 불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185억 불이 오버나이트 코스트로 나오는데 360억 불 달라고 응찰을 했고,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코스트보다 2배 가격으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kW당 2300불 기준으로 해서 129억 불이 나오는데 186억 불, 그것도 아까 따져 봤더니 160억 불이나 되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버나이트 코스트보다도 겨우 44%가 높은 가격에 우리가 이걸 땀으니까, 이게 정말로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한 걸 보니까 장관께서 ‘오버나이트 코스트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뭐 이런 유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가 설명 좀 올릴까요?

○**강봉균 의원** 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오버나이트 코스트로 예시를 하신 우리 2300불 kW/h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이번에 UAE에 수출한 꼭 그 모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하는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그것을 지금 원화로 계산하면 두 기 짓는 데 5조 5000억에 계약을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달러로, 환율을 1200원 기준으로 만약 계산하면 한

92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UAE는 해외에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 건설할 때는 솔직히 92억 달러 정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오버나이트 코스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건설하다 보면 자재를 전부 가져가야 되고 또 해외에 인력을 보내야 되면 거기에 체제비도 줘야 되고 또 해외에 여러 가지 부지 조성하는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높게 이번에 수출이 된 겁니다.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기를 적기에 단축을 하고 그 물자를 적기에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리스크 요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계약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자,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세계 곳곳에서 짓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제가 원전 실제로 짓고 있는 신고리 3·4호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

**○강봉균 의원** 글썄, 내 얘기 들어 보세요.

미국 의회의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처음에 예정했던 가격의 3배가 든다 이런 의회 보고서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세요. 최근의 사례도 많다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장관이 좀더 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UAE에 짓겠다고 하는 140만kW 1기 기준으로 46억 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만한 원자력발전소 세계 곳곳에서 짓는 데 보통 80억 불 들어간단 말이에요. 좀 알아보세요, 지금 한두 군데서 짓는 게 아니니까. 이래서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입찰가격 186억 불이 덤핑가격이냐 아니냐, 공사비 계산을 아주 비현실적으로 낮게 했다는 이런 의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료화면 6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 픽스트 프라이스 어레인지먼트(fixed-price arrangement)로 되어 있다’, 월 몇%가 픽스트 프라이스 어레인지먼트입니까?

10년 동안에 변동하지 않는 가격으로 계약을 했대요. 총 186억 불 중에서 얼마가 이 고정가격

기준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고정가격으로 돼 있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물가를, 상승분을 조정하는 그런 계약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자료화면 8을 보시면, UAE 원전의 오버나이트 코스트 건설비가 129억 불입니다마는 건설기간 10년 동안에 발생할 비용상승률에 따라서 완공될 때의 건설비가 258억에서 219억 불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최대 72억 불, 최소 33억 불까지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이런 계산이 나와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전부 하도 비밀이 많고 공개할 수 없다가 논쟁이 되지를 않아요.

자료화면 9를 보시면, 이게 순수공사비 증가요인 말고도 정말 이 정부가 뭐를 그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추가로 약속을 많이 했는지 직간접 지원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 그리고 정부가 부담할 총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앞으로 규명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UAE의 원전수출에 위험요소가 하나 있어요. 사용 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지역에, 이번에 중동지역 전체에 최초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냐 하면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UAE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미국이 바라지 않았다고 해요. 또 UAE 자신도 우리가 그럴 염려가 없도록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 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국제규범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자국 이외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봉균 의원** 자, 자료화면 10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It is a novel approach’,

아주 참 기발한 방법인데 계약자는 사전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난 후 단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게 자료가 출처가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봉균 의원 출처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우리 계약은 분명히……

○강봉균 의원 출처가 걸프리서치의 금년도 2월 12일자 기사로 보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걱정이예요. 한전이 정말 사용 후 핵폐기물, 아까 60년 동안에 돈도 200억 불 번다고 미리부터 얘기하던데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다 UAE 밖으로 실어낼 겁니까, 한전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강봉균 의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전소 짓는 게 중간에서 큰 장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저 한마디만 더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그러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솔직히 우리가 최초로 이번에 원전 수출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적정히 관리한다든지 자재를 적기에 구입해서 조달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또 여러 가지 환 리스크나 위험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면 이번 계약에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이윤을 올리면서 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화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하는 총괄 부처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UAE 원전 수출로 대규모 적자를 낼 우려가 있다든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도 ‘아이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전이 앞으로 UAE 관련된 건설계정을 한전의 재무제표에서 완전히 독립 계정화시켜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손실이 나면 전력요금을 올린다는 정부 보조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현재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은 별도로 구분 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국내의 전력사업 부문과 해외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현재 계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전수출사업을 일반적인 해외사업 부문과 별도로 독립 계정으로 구분 계리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원전 수주에 관한, 우리가 해외 원전을 여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등 그러한 불안한 우려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 계리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강봉균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강봉균 의원 대외로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 자료라도 만들어서 하다못해 한전 이사회에서도 논의하고 주무…… 관리 부서에 보고라도 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가만있었어요, 그것 국정조사 하자고 항의를 할 텐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강봉균 의원 정운찬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께서 들으신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UAE 원전 수출계약과 관련된 의문점을 제시한 이유는 이것이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굉장히 칭송을 받을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런데 7년 내지 10년 뒤에 엄청난, 차차기 정부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을 줍니다.

지금 정부가 앞으로 80여 기를 더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UAE 계약이 잘못되거나 앞으로 다른 계약에도 선례가 돼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과잉 홍보만 있지 계약 자료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물어봐도 하나도 얘기해 주는 데 없어요. 잘 된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도 청와대 비서들과 함께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말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각이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셔서 이 UAE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저는 이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장기로 내다보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강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성 의원 소개로—접니다—인천 남동구 노인복지회 어르신네들이 마흔세 분 와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좀 요령을 터득하셔야 될 텐데, 내가 어느 특정 질의 답변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15분이고요,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자가 그 시간을 다 허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령껏 답변들을 좀 하십시오. 시간을 좀 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해야지, 그냥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이 넘어가면 듣는 분들이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늘같이 나올 때는 거울보고 연습들을 하시든지요.

다음은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입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이번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에서 지금은 퇴역한 구축함 92함의 항해장교로 1년 2개월 동안 해상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열악한 기후·해상 여건과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는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경계임무에 임하다 덧없이 스러져 간 우리 젊은 해군 후배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의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경제는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 회복 추세의 견고성을 살펴보고 여전히 남아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한 후에 이번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건설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자료화면 1~3에서 보듯이—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선행지수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전반적으로 경제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자료 4에서 보듯이 1700을 돌파해서 1700선대에 안착하는 느낌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처럼 주식시장이 회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한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지난 3월까지 에퀴티 마켓(equity market), 주식시장에 주식 매입으로 들어온 자금하고 채권시장에 들어온 자금하고 한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종합지수가 1700을 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1분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대단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외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외국인 매수세가 갑자기 또 빠져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동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IMF가 최근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에서 보듯이. 또한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더 높이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장관께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정부가 5% 전망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4.6%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아마 다음주쯤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좀더 상향 조정해서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5% 수준의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최근에 경기선행종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회복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것은 전에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5~2007년의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12개월 계속 상승하다가 7개월 동안 또다시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후에 다시 또 15개월 상승 커브를 그렸습니다.

지금 두 달 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작년도 빠른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이러한 경기선행지수가 하강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동

행지수를 보면 아직도 12개월째 연속 상승이 보이고 해서 경기회복세의 장애요인으로, 그러한 지표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종합적으로 장관께서는 당분간 우리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요소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세계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였는데, 금융시장에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발생했던 두바이 사태는 거의 진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두바이 사태는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진정되고 경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올해 초 발생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 PIGS라고 그러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나성린 의원 특히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 진동수 지난 3월 25일 EU 정상회의에서 공동 지원방안이 합의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부도 위험 부분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체적인 어떤 지원 규모라든지 시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요? 그리스의 자구노력을 상당히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어떻습니까, 그리스가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리고 그리스 외에 다른 PIGS 국가들의 재정 위험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요, 우리 금융기관들의 그런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어느 정도입니까, 밝힐 수 있다면?

○**금융위원장 진동수** 우리 금융회사들의 이 네 나라에 대한 익스포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억 불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나성린 의원** 우리가 전체 381억 불 정도의 해외 익스포저가 있는데, 그렇지요? 2억 불이면 굉장히 적군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알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썄, 미묘한 문제라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에서 금년 중에는 절상될 거라는 그런 예상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문제는 위안화 절상이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장단점이 있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아 시피 경쟁하는 소비자나 제3국 수출 쪽에서는 우리가 좀 나아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대중국 수출 쪽에서는 어려움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긍정적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런 위안화 절상이 결국 원화 절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성린 의원** 전반적으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가 700조를 넘어서면서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내역이 어떻고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규모 면에서 우리가 선진

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은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부채가 느는 속도가 좀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핵심에는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그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안정적으로 이것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큰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성린 의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LTV나 DTI 규제를 철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을 줄일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 나머지 부분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일 우려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고소득층, 중상위 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는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된다든지 해서 만일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민층의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지금 서민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부담 완화라든지 어떤 금융 기회를 늘리는 쪽에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 펀드 환매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펀드 환매 규모와 환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무래도 지난날 펀드 때문에 혼이 나신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금 회복 그런 정도의 주식 상승이 되니까 아마 환매를 하는데, 실제로 한 10조 원 정도 지금 환매가 됐습니다만 저희 주식형 투자신탁 규모가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를 동안 한 1조가 갑자기 빠져 나가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빠져나가 가지고 어디 부동산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대개 증시 주변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펀드 환매 물량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 이후에는 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일부에서는 장기주식형펀드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작년에 우리가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투자가 단기적이지 않고 좀더 장기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재정전문가로서 이미 인센티브는 충분히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펀드 관련 회사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 해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쫓지 1, 2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가 금융감독정책의 많은 부분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금융회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시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위험도를 살펴봤는데요, 재정위험도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 통화·환율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재정위험도가 바로 국가부도

사태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왜 다른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환율정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재정위험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작년 결산 결과를 제가 한번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원래 작년 말에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졌더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리고 재정적자 규모도 절대액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대이지만 비율로 봐서는 작년 말 전망치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 이유가 뭘니까, 이 두 가지가 줄어든 이유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첫째, 작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입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늘고 세출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당초에 -5%로 봤던 것이 -4.1%로 줄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채무비율도 1.8% 줄어서 당초에 35.6%로 생각했던 것이 33.8%로 줄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정되었던 국고채 발행을 많이 감소시켰지요, 그렇지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플러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GDP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그러다 보니 세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채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국가채무 비율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번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를 줄이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의 중요성, 특히 GDP 크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물론입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채무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성장잠재력의 제고,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신규 노동인력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경제가 계속 성장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긴급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적절한 감세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재정위험으로 인한 국가부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 채무 규모의 급증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최근에 지방정부의 채무가 증가한 원인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측면이 있었고요, 세입 측면에서도 내국세가 감소되니까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교부세도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채무는 약 19조~20조 정도를 유지해 왔었는데

요. 작년과 재작년, 그런 2년 동안에 약 7조가 늘어나서 지금 전체적인 지방정부 채무는 약 27조 정도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고 순수하게 대외적인 채무는 약 한 13조 5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예,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하도 이제 지방정부 재정이 줄었다고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아까 자료화면 11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지금 또 동시에 지방채무도 늘어났어요. 지방채무도 늘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재정의 규모보다는 지금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작년도 중앙정부 예산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중은 135%에 달합니다라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정부에서, 어제 또 어느 의원님 질문에 계셨습니까라는 지방재정의 방만 경영 사례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건축을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이루어진다는지, 이런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절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지방파산제도를 조만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의원님, 외국에서 가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라는 우리나라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로서 자원도 부족한 나라인데 만약에 지방의 어느 자치단체가 파산에 돌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의 대외신인도나 하는 것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논의 자체를 자제했으면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부동산경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그 결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볼 때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고 내리면 또 내린다고 걱정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정말 하락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은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TV나 DTI를 강화하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4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나성린 의원 부동산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성린 의원 급격한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가격안정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하락에 부동산가격이 급락을 해서 장기화될 경우에 거래를 위축시킨다든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보합 쪽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서민의 주택안정 측면에서나 또 경기보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나성린 의원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업계가 4중고를 겪고 있다, 미분양, 해약민원, 중도금 납부거부, 입주 지연,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에서도 아까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미분양적체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세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

부문에서 매입을 해 준다든지 투자상품을 활성화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에 16만 6000호까지 기록했던 미분양 물량이 지금 한 5만 호 정도 정리가 되어서 11만 6000~7000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안고 있던 재고 정도가 아닌가 보여지는 데요, 지금 전체적인 지방 주택 경기하고 맞물려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계속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성린 의원 양도소득세 완화는 제가 계속 연장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제가 법안을 내니까 또 기획재정부에서 법안을 냈더군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요.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금융 규제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번에 양도세 감면 허용할 때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좀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나성린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 투자만 감소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건설 투자가 2월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공공 부문 투자를 우선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부족할 때는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때 가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 공공 부문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4대강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금자리도 있고 하니까.

민간주택이 문제거든요.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같은 것 또 추가 건축 규제 폐지 같은 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 몇 달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료 19에서 보듯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절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일부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호주나—이것은 공식 발표된 통계이기 때문에—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의 절상 속도가 좀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 우리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경우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강력한 투기세력이 개입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환율시장을 언제나 예의 주시하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시장 기능을 믿는데요, 최근에 증시나 채권시장에 외국자본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유의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서민 생활 안정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두 달간, 1~2월 달의 실업률이 거의 5%에 육박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특별한 무슨 고용 여건이 달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 2월 실업률이 작년 12월에 3.5%에서 1월 달에 5%로, 2월 달에 4.9%, 계절조정을 하면 4.8, 4.4%로 올라간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경황인구로 있던 부분 중에서 경황 인구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소위 정부가 추진,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것에 대한 참여자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경황 인구로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통계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서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 되면, 지금 아직 3월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는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면 고용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난 2월 달에만 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만 50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이런 고용 지표도 상당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식 실업자 수는 이제 좀 증가해서 11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실질적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섰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자료 21에 있듯이, 장관께서는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우리의 실질적 실업자가 400만 명에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나라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는 고용통계가 서민들의 체감지수를 반영하는 데에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보면 보통 고용지표를 U1에서부터 U6까지 여러 가지 고용 보조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말 그대로 ILO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 간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한 89만에서 지금 우리 실업자가 120만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공식통계이고요, 그 대신에 비경제활동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취업 준비자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자가 있고요, 또 쉬었으면 하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또 구직 단념자가 있습니다. 또 불완전 취업자라고 그래서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고 싶다는 것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를 엮어서 경활인구로 간주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취업자가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구분해 주어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400만으로 만들어낸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한 180만 정도 되고요, 올해 보면 2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취업애로계층 인구 숫자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노동통계를 국제기준에 따르되 서민들과의 차이가 나는 그런 체감지수의 차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고용 보조지표를 쓸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자꾸만 정부가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실업지표를 빨리 개발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추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추세?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난번 대통령 주재 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고용전략회의에서 단기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중장기 대책으로 고용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로 하고 있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따라서 전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3월 12일부터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또 장기실업자소득공제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요, 지난 2월 12일부터는 취업장려수당이나 전문인턴제 등 재정사업은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견기업 육성전략도 지금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의 일환으로 어제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금 이러한 고용창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난 2월에 야당의 협조로 '중소기업 고용지원 세제'를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시원치 않습니까, 아직?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정적 변수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위 예를 들면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서민생활 안정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무상급식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재 13%,

전체 학생의 13% 수준인 97만 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만약에 초중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1조 650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나성린 의원 부모가 재정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복지 선진국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하고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나성린 의원 사정이 많이 다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나성린 의원 극히 일부분이네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나성린 의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재 13%인데 2012년까지 한 26% 이상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게 되면 차상위계층까지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되면 소위 저소득층하고 농산어촌 주민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나성린 의원 ‘선택적 무상급식이 수혜 학생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종전에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급식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 수강권 또는 인터넷 통신비 이런 것들이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보호자를 통해서 학교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가 하지 않고 이것을 읍·면·동 주

민센터를 통해서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한나라당도 대부분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농산어촌 학생들을 포함해서 결식 학생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함으로써 들 수 있는 돈을 차라리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유아교육비로 돌리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고 그런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실 이번에 한나라당 여당이 제시한 것을 좀 바꿨지만 전체 드는 돈은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좀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이 ICL제도에 대한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하는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좀 그런 편입니다.

○나성린 의원 ICL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정부가 얼마까지 해 줬지요, 처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때 9조 원까지 해 줬습니다.

○나성린 의원 9조 원 정도 해 줬지요. 그런데 지난 1학기 때 얼마 정도 지급보증을 해 줬습니까,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 1조 5000억 정도.

○나성린 의원 굉장히 적네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또 2학기가 있으니까요. 2학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나성린 의원 그래도 기대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저조한 이유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우선은 의원님도 기억하시지만 국회에서 결정된 시기가 아주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기하고 이게 같이

마주쳐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부모님이 학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자율, "이자율이 높아서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앞으로 계속 가능한 한 우리가 낮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어렵게 만든 대책인데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금융위원장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작년 말에 대표적 서민금융 대책으로 미소금융을 확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소금융을 위한 총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융위원장 진동수 지금 현재 한 7000억 이상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번에 이 제도 확대를 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대출 실적이 됩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대출이 현재까지 한 40억 쯤인가……

○나성린 의원 굉장히 미미하네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지금 한 석 달밖에 안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소금융은 다른 어떤 생활안정, 서민들에 대한 다른 대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자립, 자활 그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금융과 그러한 창업 지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처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실적이 나타나고 같이 평면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성격의 그런 금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정성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지점이 한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점을 늘리고 그리고 점차 탄력이 붙으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

다.

○나성린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예금 이것의 서민 대출 의무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민금융회사들의 소위 비과세 예금이 과연 그런 서민금융회사의 목적에 맞게 실제 대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비과세 예금 재원을 회사채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거나 부동산 대출에 쓰고 있거든요, PF 대출이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의 일부 출연을 받아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보증대출 쪽으로 해서 서민 대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비과세 예금 재원으로 회사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산 운용을 규제를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서민금융기관들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서민금융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전환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실 제가 마지막 꼭지가 하나 남아 있는데 '경제회복 공고화를 위한 대책' 여기서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좀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해 본 이후에 대내외 경제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경제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여건이 조금 더 호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세의 견고한 유지, 서민 빈곤층의 생활 안정, 일자리 문제 해결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가계 부

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예, 나성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용 의원 소개로 경기도 안성시 환경대 평생교육원, 향토문화유적답사단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20인, 스무 분이 오셨습니다.

이시종 의원 소개로 충북 충주 지역구민 아홉 분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종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민주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것이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한 전 총리 당선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이 아닌가, 이것도 일종의 관련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청와대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 세 번째로 오늘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데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런 일은 전연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만약 오늘 무죄선고가 날 경우에도 총리께서는 아무런 책임의식을 못 느끼신다, 그런 얘기가 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총리가 수사나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예, 세종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의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충청도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

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이 되면 충북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일 때 그 외곽에 위치한 충북이 경제도시로 발전합니다. 행정과 경제는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키는 거지요. 상생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그 외곽에 위치한 충북과 똑같이 경제도시가 된다면, 세종시와 충북은 상호 경쟁관계를 일으켜 세종시 수정안의 블랙홀 현상으로 충북의 기업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 충북은 빈털터리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우선 세종시는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세종시와 인근의, 혹시 비슷한 성격의 도시라 할지라도 인근의 도시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양쪽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블랙홀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넓이는 110여만 평인데 이미 90여만 평이 다 입주할 원하는 기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도시들이 세종시 때문에 블랙홀 현상을 전혀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의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세종시 산업단지 땅값이 싸다고 하는데 이는 오송·오창의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싸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충북의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송·오창 산단이 평균 분양가가 70~8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원래가 22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분양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송·오창단지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또 세종시에 설립되는 신규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오송·오창산업단지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송·오창으로 갈 기업들은 땅값 싸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인근 세종시로 갈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36만~40만 원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개발하지 않은 채로 공급하는 원형지입니다. 개발비용하고 공공용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성가격은 1평당 80만~90만 원 이상으로 오송·오창산단에 비해서 결코 싼값이 아닙니다.

세계 지원 측면에서는 산업단지가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전체 산업단지 규모와 산업단지 활성화,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세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서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면 오송은 BT 분야로 또 오창은 IT·ET 분야에 특화된 기능지구로 지정되는 등 세종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종 의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한다면 전국의 산업단지 땅값을 오송·오창을 포함해서 세종시처럼 모두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분양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제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세종시 땅을 220만 원에 분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우선 원형지라는 게 있고, 또 산업인프라가 들어갈 땅이 있고, 상업이 들어갈 땅이 있고, 공공기관이 들어갈 땅이 있고, 또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거용 땅이 있습니다. 그 땅값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220만 원이라는 것이고,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종 의원** 지금 충북도는 당초 210만 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오송의 제2 생명과학단지를 103만 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옆에 세종시 수정안이 들어오면 오송의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줄였다. 반 이상으로 줄였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즉 피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천안함 참사, 지방선거, 유조선 해적피랍 이런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4월 국회에 꼭 통과시킬 의향이 지금도 있으신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세종시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송 2단지 면적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농업용 저수지와 KTX 역세권 개발지역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다시금 확인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충북도에서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의 여론이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사실과 루머나 여론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러시고요.

총리께서 “천안함 사고 수습 후에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문에 났던데? 천안함 사고 수습 후에……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여러 분들이 “천안함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셔서 관계자들이 그 원인에 따라서 백번, 천번 사과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이시종 의원** 거취까지도 표명……

**○국무총리 정운찬**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시종 의원** 만약에 거취의 문제를 표명하신다면,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취임했으니까 퇴임하실 때 세종시 수정안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자해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세종시 때문에 총리가 되지는 않았습시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총리직을 제안하실 때 세종시의 ‘세’ 자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국가도 어려움에 처하고 도시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

므로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혁신도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 마찬가지로지만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현재 진척도가 5%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로요.

혁신도시를 2012년까지 만든다고 당초 계획에 돼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이?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지금 현재 2010년인데 2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것을 위해서 부지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말까지 공정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청사 설계 및 청사 착공 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양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또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장들하고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2월~3월에 만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는 4월 26일에 만나 가지고 공공기관을 차질 없이 이전토록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의 이전 추진실적을 인사고과 등 경영평가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2012년까지 완전히 끝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믿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시종 의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재원 22조가 하늘에서 별도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예산을 균등하게 줄여서 만든 재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시종 의원**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 투자도

전 국민, 전 지역에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에 투자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34%가 더 투자되는 것이지요. 전체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비낙동강 권역에는 40%만 투자되고, 그게 결국은 낙동강 유역에 34%, 그게 7조 500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7조 5000 예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낙동강 권역에서 거둔 돈을 낙동강에다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의 낙동강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옛말로 따지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식이고, 비낙동강 지역 중 4대강 사업을 하는 데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게 됩니다. 그런데 비낙동강 권역 중에서 4대강 사업이 없는 데는 말로 주고 아무것도 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불평등의 극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서 길이가 길고, 홍수·가뭄 등에도 취약하고, 또 댐 홍수조절 용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또 하류 지역은 갈수기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하천 정비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낙동강보다 못하지만 강의 상태는 영산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금강, 한강이 제대로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종 의원**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서 다소 좀 심각한 것은 아는데요, 지나치게 비낙동강 권역의 예산을 전부 다, 7조 5000을 빼서 낙동강에 지금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총리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이시종 의원** 그리고 낙동강 권역에 투자되는 34%, 7.5조 원은 사실은 타 지역이 써야 될 예산인데 거기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이 7조 5000만이라도 줄여서, 그것만이라도 줄여서 무상급식 또 농촌, 재래시장, 장애인 이런 데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금년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필요보다는 좀 덜 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2.9%보다도 3배 이상 높은 8.9%가 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예산 따져 보니까 추가가 더, 1조 한 6000억 정도만 추가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조 6000억은 연간 1조 5000억 규모로 감면해 주는 중부세 그것만 다시 제대로 돌려도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낙동강 사업에 더 투자하려는 7조 5000억 중에서 1조 한 오륙천만 더 이렇게 삭감해서 무상으로 돌려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무상급식을 위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의원님의 높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총수의 아들이나 손자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복지 효과도 크고 전체 사회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총리 말씀대로라면요, 그러면 초·중학생들에게 수업료 이런 것도 부자 아이들은 받고 가난한 아이들은 받지 말아야지요. 무상급식…… 의무교육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학료, 입학금, 등록금 그다음에 교재대, 급식 이것이 다 무상교육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요새…… 그 논란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하시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대형마트,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외교통상부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그게 통과가 안 된 거 아시지요, 우리 총리께서도?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삼성테스코 합작회사인 영국의 유통회사가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인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전혀 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또는 삼성테스코의 합작회사인 영국 유통회사의 뭐 부탁 때문……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SSM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WTO나 FTA 이런 국제규범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약속한 국제규범 내용에 합치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테스코 합작회사 거기서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전달해서 외교통상부가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시종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이 문제는 중소기업 보호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피해를 덜어 주는 데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96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한 없는 양허’로 무제한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SSM이 무제한 들어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선진국들은 ‘무제한 개방’이 아니라 ‘제한적 개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거의 다 무제한 개방을 했는데, WTO 규정에 보면 “회원국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그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에 협상된 게 1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14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뭔지, 재협상 의지조차 없는 건지…… 지금 국내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죽어 가는데 재협상을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그것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도 아마 의원님만큼이나 ‘경제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 WTO 가입을 할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외국에서의 개방도하고 우리의 개방도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개방도가 훨씬 더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바꾸는 것은 항상 한쪽에서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종 의원 아니, 재협상을 하는 시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협상? 3년만 지나면 재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시종 의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국무총리 정운찬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충북에서 원하는, 충청도에서 원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빠졌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 구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내륙첨단산업벨트, 그다음에 백두대간벨트를 언제 지정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국토부에서 조만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4월 또는 5월입니다.

○이시종 의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첨복단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2월 28일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 주지 않았더라

면 대구·경북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챙겨 주시지 않았었다면 이게 몽땅 충북 오송으로 100% 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챙겨 주는 바람에 오송에 100% 올 게 반 깎여 가지고 일부 대구·경북으로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동관 수석 얘기는?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 언론 보도 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적지 입지로 선정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이동관 수석의 사후의 해명 내용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반쪽짜리 첨복단지 2개를 만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 2개 만들지 마시고 완전한 첨복단지 2개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2개로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당초에 5조 6000 가지고 1개 단지에 투입해야 될 것을 갖다 둘로 나누는 건데 이것 반씩 쪼개지 마시고 5조 6000씩을 각각 투입을 해서 완벽한 첨복단지를 만드는 게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워낙 소요 경비는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총 8조 600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은 5조 6000억 원을 쓰기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둘로 나눠서 2조 8000억씩 하면 너무 규모가 작다 해서 53%를 늘려 가지고 8조 6000억 원 정도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시종 의원 11조 20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조 2000?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경제학자입니다만 규모의 경제 등을 따져 본다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두 배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언제 지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정을 한다면 청주·청원·증평뿐만 아니라 진천·음성까지도 추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

약에 진천·음성도 포함해서 신청하신다면 전문가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입니다만,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개발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교과부장관, 잠깐 좀 뵈겠습니다.

충북 영동대의 제2캠퍼스 부지를 아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교과부에 이전승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시종 의원 상당히 그 지역에서 아주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것을 불허, 일단 불허하시고 6~12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갖고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떨지 이것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영동대학에서 몇 개 학과를 이전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만 대학이 이전할 때는 그 지역 교육이나 경제, 문화 이런 것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 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시종 의원 충분히 좀 숙려기간을 두고서 나중에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이상입니다.

기재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동의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작년까지는 혜택을 받다가 1월 1일부터 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 좀 꼭 받도록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 문제 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집권 5년 동안

에 10조 원을 출연해서 농가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서 출연하겠다는 10조 원은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 10조 원 중에서 일부라도 반영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직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농림부장관하고 좀 상의하셔서 10조 원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감차보상 제도가 작년 4월 달에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준비가 안 됐다 이래 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 돼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택시감차보상 예산을 좀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택시 업계 관련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사무입니다. 중앙재정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면허를 동결한다든지 부실업체 퇴출한다든지 이런 구조조정이란든지 영업환경 개선 노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택시 업무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때 당시에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동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장관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요, 언제쯤 반영될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6월 달쯤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6월 이후에 7월, 7~8월쯤에는 반영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6월 달까지 마무리되면 그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것 반영시키면서 우선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충주호 상류 지역, 단양에 수중보 건설하는데 수중보 건설을 하류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추가 비용이 한 300억 더 늘어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추가 비용 300억 원을 단양군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그동안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는, 현재까지의 결과는 추가 비용은 단양군이 부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워낙 단양군이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그런데 단양 수중보가 국가시설인 충주호 내 시설물이고 소유권도 수공이고 관리권도 수공이고 이용도 수공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면 맞지 않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게 사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시종 의원 이걸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어느 곳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다시 위치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플러스알파가 되니 이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의 흐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충청고속화도로가 원래는 충청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충청고속화도로로 설계가 지금 진행되는데 고속화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본설계 시에 노선을 제천-충주-청주를 지나서

보은-옥천-영동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타당성조사에서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든가 개선해 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 등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당초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통과 노선을 결정했는데 또 새로운 노선이 또 나오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의원 다른 노선이 아니고 연장 개념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연장해서 노선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장하다 보면 사업 추진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따져서 이거를 반영할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음성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단 지정에서 빠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원래 정부가 2005년도에 이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 태생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KDI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규모나 언제 개발하는 게 적정하냐, 수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곧 착수할 예정이니까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충청도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천안함 참사 문제가 수습된 이후 총리께서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세종시 수정안을 갖고 취임하신 정운찬 총리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세종시 수정안도 함께 갖고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운찬 총리께서 거취 표명하실 때 함께 세종시 수정안 논란도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이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윤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운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출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백령도 앞바다에서 실종되신 해군 장병들과 98급양호 선원들의 넋을 기리고 삼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는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저는 국토해양위원이자 4정조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에는 4대강 사업을 두고 대운하 의심사업이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운하가 되려면 전 구간의 수심이 6m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사업계획서 상에 3~4m인 데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대운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 예산 심의 단계에 접어들자 철도, 도로 등 다른 SOC 예산을 대폭 깎고 교육 예산, 복지 예산을 대폭 깎아서 4대강에 쏟아 넣는다 이렇게 선동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SOC 예산 사업과 또 교육·복지 예산에 예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이를 결과적으로 반영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주장도 사라졌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위법이라느니 졸속 추진이라느니 심하게 비난

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도 이 사업이 국가 재정법상 제외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 면에서도 이 4대강 사업은 정부가 투입 대 산출 효과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정부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치수사업이자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자원공사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두고 예산을 분식하느니 수자원공사법·하천법 위반이니 하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SOC 사업은 그 특성상 정부가 직접 단기 재정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사채를 발행해서 차입금으로 시행을 하고 그 비용을 장기적으로 상환해 가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 공감을 얻으면서 이 주장도 다시 잠잠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반대여론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공사를 중단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면 감안은 하시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종교계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 2월 초에 정부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같은 자세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경위가 어떠했고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우선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2월 초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실무자의 토론 참가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요.

3월 12일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 염려를 한 이후에는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주교님들께서는 환경 문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각별하신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국토부 외에 환경부장관이나 차관도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옳지 않았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사실은 그 이후에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적이라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부분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지방 단위에서도 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수중보와 수질오염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을 살리려는 4대강 사업이 도리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악화시킨다 이런 주장이 여전합니다.

그 논란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 4대강 사업에 설치하려고 하는 16개 보…… 16개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16개 수중보가 물을 막고 유속을 느리게 해서 이걸 오히려 강물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보는 이미 우리 국내외 여러 하천에서 실제로 설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만 해도 우리가 잠실과 행주대교 아래 보가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 보를 통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충분한 유량을 확보를 해서 상수원으로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살펴보니 다뉴브강에는 69개의 보가 있고 라인강에 17개, 템즈강에도 45개의 보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려는 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4대강에 설치하려는 수중보는 단순히 물막이용 고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최첨단 시설의 가동보입니다. 컴퓨터로 때로는 들어올리기도 하고 낮히기도 해서 물을 바닥에서부터 흘러가게 하는 가동보입니다.

낙동강의 강정보, 달성보, 상주보 등 8개의 보와 영산강의 죽산보, 송촌보, 그리고 금강의 부여보, 금강보 등 모두가 각 구간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또 첨단 IT기술, 그리고 우리의 세계적 수준인 토목기술이 융합되어서 수질과 수량을 자동 측정해서 작동하는 이 가동보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중보로 인한 수질오염은 우려할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토부장관께서 바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동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염원을 어떻게 제대로 차단하느냐 하는 문제고 아무리 오염원을 차단해도 갈수기에는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계절 물을 어떻게 충분히 흘러주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은 바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염원 차단 작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바로 물을 충분히 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댐도 만들고 저수지 둑을 높여서 물을 확보해서 사시사철 물을 항상 강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물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백성운 의원** 그러면 수중보는 물의 양을 늘려서 수질을 오히려 개선시킨다 그런 뜻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물은 고여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흐르며 적당히 있으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댐을 보면 알 수 있

습니다. 우리가 댐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도 물이 깨끗한 이유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물의 자정작용과 충분한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리가, 바로 댐의 물이 깨끗한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저 수중보도 시행사들이 전국에 설게 공모를 해서 만든 당선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가장 아주 우수하고 잘된 효능이 좋은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수중보가 아니라 총인, 즉 물에 녹아 있는 인 화합물의 총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의 녹조 발생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하천을 썩게 만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4대강에 발생하는 1일 총인의 양은 24t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오염원 순으로 보면 하수가 35%, 비점오염, 산업폐수, 가축분뇨 이런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에 이런 총인 발생을 줄이고 차단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수질 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얼마나 사업을, 이 총인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총인 저감사업이 하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제약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사업에는 총인 저감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해서 약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 이렇게 돈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 총인의 방류수 기준을 최대 10배는 강화해서 총인을 잡아서 녹조를 잡아 준다면 상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 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하수처리장이거나 이런 것도 강화를 하면 훨씬 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 하천 내의 경작지도 보상을 하고 다 걷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전체 하천에서 농사짓는 그 면적이 한 5000만 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하천 내에서 경작하는 것 때문

에 하천 오염이 상당히 촉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농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2년 동안 농사짓는 것을 보상해 드리면서 농사를 다른 데로 짓게 함으로써 아마 수질개선의 효과도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 앞으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강의 수질이 매우 좋아지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홍수기를 아무 탈 없이 넘겨야만이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의 홍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올 여름에는 태풍이 예년보다도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가 학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만약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올 여름에 강한 태풍이 자주 내습할 경우 이제 막 공사 초반에 들어간 4대강 사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4대강의 수해대책 문제를 검토를 해 놓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보들이 심상치 않고 그래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를 만드는데 가물막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16개 보를 만드는데 그중에 7개 정도는 보를 완전히, 가물막이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개는 그동안 남겨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9개 중에서 6개는 완전히 가물막이를 철거하고 나머지 3개도 가물막이 높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이런 수해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수해 이전에 준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좀 빨리 촉진시켜 가지고 강의 홍수 소통 능력을 높여 주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4대강에 손을 대지 않았을 때보다도 홍수 소통 능력을 훨씬 더 높여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대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저도 염려가 되어서 함안보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 조금 나오겠습니까마는 홍수기 대책과 관련해서 왼쪽에 제2 참조수위 지점의 수위가 6.6m를 넘게 되면 이 물은 정확히 8시간 21분

만에 화면 오른쪽 보 건설 현장에 도달해서 가물막이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안보의 경우에 제2 참조수위 지점의 수위에 따라서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상황이 분류되고 각 상황에 따라서 행동지침이 달라지고 또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으로 얼마나 충분할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여기 외에도 더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가지고 정말 다시 유실이 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더 들고 이로 인한 또 사고가 생기고 이런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홍수에 대한 예·경보, 모의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 대책은 계속 보강을 하면서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직접 연계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4대강 본류만이 아니라 지류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4대강 사업하고 또 섬진강 이런 지류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밝혀 왔는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4대강 본류뿐만 아니라 직접 연결되는 지류사업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번 4대강 사업에 상당 부분 지류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섬진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이게 사업 개수로 보면 24개 정도 되고요. 사업 규모로 보면 1조 7000억 정도 되는 대단히 막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운 의원** 섬진강하고 지류사업을 포함해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이게 한 2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15개 사업은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사업도 5월까지 착공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그러면 이 연계사업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것도 역시 2012년까

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12년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백성운 의원** 그러면 우리 4대강 사업은 11년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4대강 본류사업은 11년까지고 4대강과 연관된 사업은 12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또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4대강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식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흙탕물을 줄이고 안전하게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준설할 때 흙탕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저희 나름대로 안전한 기준치를 설정해 갖고 이 이하로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 준설을 한다든가 또 만일 수상 준설 할 때는 흡입식을 통해서 이런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공사 할 때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든가 침사지를 여러 개 설치해서 침사지를 흙탕물이 통과할 때 마지막에는 거의 흙탕물이 아닌 상태로 통과되게 함으로써 이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홍수 시 농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오탁도를 줄여 가지고 정화를 한다면 절대 먹는 물의 안전도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동시에 하지 말고, 한두 군데 시범사업을 우선 해 본 뒤에 그다음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실시한 후에 하자는 이 안이 좀 불합리하고 오히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어떤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누누이 설명드렸습지만 이미 시범사업은 80년대에는 한강정비사업을 우리가 올림픽을 앞에 놓고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지금의 한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효과라고 보고 있고, 90년대에는 또 태화강을 살려서 지금 태화강

에 맑은 물이 흐르고 아주 좋은 강이 된 그런 시범사업을 이미 상당 부분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시범사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지금 상당히 눈에 가시적으로 오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역균형발전에 굉장히 강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어느 한쪽만 하게 될 경우에는 안 하는 지역에서 또 강하게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그동안 지역의 요구를 받아 보니까 거의 100조 원 이상 되는 지역의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얼마를 반영한다는 문제, 또 잘 아시다시피 도로나 철도와 달리 강은 물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류 상류 하류 이렇게 강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하고 말고 그치게 되면 다시 또 비가 오면 묻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공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 주는 게 돈도 절약되고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실제로 어느 한 지역은 하고 어느 한 지역을 빼놓고 했다면 지금 아마 주장이나 논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백성운 의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역별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절대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이 소송에 저희가 이긴 바가 있고요. 각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절대, 지금 이 시기에 대명천지에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법원에 설명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이제 새로운 수변공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 수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변공간을 체계적·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 가고 있는 선진국의 개발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런던 그리니치 밀레니움 빌리지 여기는 중층고밀, 용도복합, 직주근접, 친환경 등 다양한 계획과 개발방법을 적용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의 올림픽 빌리지, 독일의 함부르크 하펜시티,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도로가 도시의 중심이 아니고 하천이 도시계획 중심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위에 언급한 선진 도시들의 사례를 감안해서 지난 1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회수토록 해서 다시 하천 관리에 쓰도록 하는 장치도 했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친수구역 지정 및 조성사업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강을 살려 놓고 나면 아마 강 주변에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살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 놓는 게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법이 꼭 필요하고요. 혹은 또 이 법이 수공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4대강 주변의 개발 주체는 수공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LH공사라든가 여러 이런 공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공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정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앞으로 4대강을 살려 놓은 이후에 4대강 주변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간 한 번도 전 수계에 걸쳐 제대로 준설하지 않아서 오염된 이 퇴적토를 걷어내고 4만 불 소득에 대비해서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대한민국의 녹색미래를 열어가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그 이름을 걸고 사업비 전체를 임기 내에 투입해서 책임 완수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사업입니다. 기공식만 해 놓고 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에 넘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전국에 걸쳐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하고, 또 보를 만드는 공사 현장을 놓고 강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을 죽인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장면만을 놓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2011년 완공 후에는 4대강과 그 주변은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으로 수려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계속 정치권에서 반대한다면 이는 정말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청계천에 놀란 가슴 4대강에 떨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 마땅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4대강은 그 누구보다도 4대강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정말 4대강 사업이 그 주민들의 미래의 삶에 더 좋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선거를 두 달 앞둔 이 시점에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 국민을 이롭게하고 전 국토를 아름답게 되살리는 국가적 사업에 우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혼연히 동

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윤성 백성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했다”도 영어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주한미연합봉사기구 장병 80명이 와 있습니다. 미국 장병이 40명, 그리고 한국군이 40명이 와 있습니다.

방청석은 통역 장치가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오신 것을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좀 흔들어 주십시오.

(「welcome」 하는 의원 있음)

“Welcome to Parliamentary of ROK, good afternoon!”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김용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九 議員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공격에 중소기업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 중소기업청 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63.7%가 줄어든 5조 3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기금은 27.7%가 줄어든 9조 5000억 원에서 6조 8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무엇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정책자금의 급격한 축소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신청에 성공하려면 접수 하루 전날 텐트라도 치고 기다려야 할 판이고,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된 자금도 있습니다.

또 공공공사 입찰 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 해 주는 분리발주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저가 하도급과 저가 납품 강요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장관님께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불가불 본회의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金容九 議員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해 50% 이상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容九 議員 또 지난 2008년 11월 10일 제2차 중소기업전략회의, 소위 말하는 청와대 병커회의에서 조달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공공공사 37조 887억 원 중 조달청이 집행한 공사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확대효과를 추정하면 약 2조 600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金容九 議員 2010년도 중소기업청 일반회계가 1조 9000억 원입니다.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이것보다도 더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병커회의 이후 조달청이 국토해양부에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아마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병커회의 이후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가 국토해양부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는, 200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500억 정도 됐는데 2009년도에는 한 8700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라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金容九 議員 좀 늘긴 늘었구먼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2009년도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모니터링 운영 결과 개선조치한 건수가 384건 중 224건, 58.3%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일괄입찰을 핑계로 시공사에 모든 것을 맡겨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례가 지난 3월 11일 조달청에 일괄발주 의뢰한, 4대강 23개 공구 4조 9000억 원을 일괄발주하지 않으셨어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러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金容九 議員 그러면 일괄발주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와 시공만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사실은 턴키 같은 일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물량을 사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이런 턴키사업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지금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청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턴키라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분리발주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지금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품목이 120개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지정돼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러면 이 안에 120개 품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발주라는 명목으로 자재까지 일괄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金容九 議員 지금 자재까지 발주하지 않았어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자재는 그때 당시에는, 발주할 때는 이게 턴키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라서 물량 같은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량이 나오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4대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레미콘 같은 경우에 자체 배치플랜트(batcher plant)는 한 군데인가 밖에 없고요, 거의 다 지역의 중소

업체 레미콘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議員** 쓰고 있는 것은 납품을 받는 거냐, 직접 구매를 하느냐, 차이가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4대강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은 분리발주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턴키공사의 특성상 초기에 물량까지도 일괄발주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물량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金容九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현장에 보면 말이지요, 공기 차질이다, 품질 문제다 해 가지고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쓰는 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金容九 議員** 배처플랜트를 한다든가 레미콘 공장을 한다든가,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군데만 불가피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현지 지역 업체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거기에 시설한 배처플랜트나 레미콘 공장은 시설인증 받은 시설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원래 인증은 없는데요, 다만 어떤 조치가 돼 있느냐면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 이것은 완전히 KS 규격기준에 맞도록 감리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것 편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작용이 무척 큼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전부 KS 품목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金容九 議員** 전국에 400~500개가 지금 산재돼서 어느 거리나 90분 안에 배달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공기 때문에 핑계를 대서 현장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시설도 아니고 이것은 불량자재를 갖다가 밤새 만들어서 공사에 써 버리면 감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폐단이 무지하게 많습시다. 그러한 사례가 전국으로부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것 앞으로 철저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분리발주를 안 함으로써 국고손실이 난다는 것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직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容九 議員** 제가 지금 현재 실례를, 2009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입수 못 해 가지고 2008년도 아스콘하고 레미콘을 예로 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의 구분인데 아스콘의 경우 3400만t을 써야 되는데 2000만t을 일괄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일괄발주를 함으로써 평균단가가 9450원이 높아집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제비용을 15%~20%를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일괄로 하면. 분리를 하면 이것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2078억이나 됩니다.

또 레미콘의 경우도 연간 생산량은 8000만<sup>m</sup>인데 5000만<sup>m</sup>를 일괄발주했습니다. 이 경우도 <sup>m</sup>당 평균단가가 9000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4950억 원.

이 두 품목만 하더라도 7000억이라는 게 국고에 더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국고 손해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어쨌든……

○**金容九 議員** 저는 도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서 같은 품목을 분리발주를 하면 부가세만 인정을 해 주고 일괄로 공사 묶어서 해 주면 15%~30%까지의 제비용을 계산해서 주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중소기업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 문제가……

○**金容九 議員** 예, 이것 말이지요,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20개 품목의 중소기업 분리발주 품목을 이런 식으로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아마 중소기업 예산보다도 더 많은 손해가 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이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議員**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괄발주 방식의 문제점 분석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건전성의 훼손, 둘째 국민 혈세의 낭비, 셋째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넷째 사기·배임의 도덕적 해이, 다섯째 빈부 양극화의 심화, 여섯째 뇌물과 부정부패의 온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합하는 공사용 분리발주 자재를 장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신한금융그룹은 2009년도 결산에서 신한카드사가 모기업인 은행보다 1000억 원이나 더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카드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인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금융당국은 카드업계 자율로 재래시장 8만 6000개 가맹점 및 매출 일정기준 미만 25만 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발표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일부 카드사는 아마 IT시스템 관련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가.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말씀하신 카드 수수료를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미 수수료를 인하를 했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니, 이미 인하해서 지금……

○**金容九 議員** 내부적으로……

○**금융위원장 진동수** 인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두 회사가 4월 중순부터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金容九 議員** 그러면 이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조정을 합니까, 카드사 자율로 합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카드사가 자율로 하게 돼 있는데,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카드 수수료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서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여전법, 그러니까 여신금융전문업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있었을 때 카드사 관계자들, 협회 관계자들이 와서 거기서 아마 자율적으로,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수준으로 그다음에 중소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인하·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대로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방금 답변 말씀 드린 대로 죽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영세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렸습니까마는 지난번 여전법 개정 논란을 하면서 더 내려 가지고 사실은 재래시장 같은 데 영세업체들은 지금 대형마트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金容九 議員**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나라 카드 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면 카드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마 지금 가맹점 공동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맹점 공동 이용을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8~9년 시행하는 동안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이미 99년 인가요?

○**金容九 議員** 예, 99년이 맞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이미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金容九 議員** 하다가 2001년에 다시 자율로 돌렸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러니까 폐기를 하고 자율로 공동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가맹점들을 다 개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공동 이용을 통해 가지고 당초에 도모했던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

습니다마는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느 제도가 반드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容九 議員** 부작용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부작용이 이제 결국은 공동 이용을 해 놓고서 또 과도한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카드사의 신규 진입이 어렵게 되고 일반 카드회원 입장에서 원래는 복수카드를 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었는데 복수카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이용의 당초 생각했던 실익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런데 복수카드가 일반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3조2항을 실행을 하면 이 복수카드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게 제일 좋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金容九 議員**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金容九 議員**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제도 중에 23조2항을 하면은 자율 조정이 되게 돼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이 공동망 운영을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도록 합니까?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말하자면 생선 지키라고 고양이한테 맡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따져 보셨어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이 공동이용제도에 대해서 지금 한 8~9년 운영을 해 본 결과 99년에 그렇게 폐지를 했고요,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런 영세업체나……

○**金容九 議員** 저, 위원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닙니다.

○**金容九 議員**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999년도에 시행을 했다가 2001년도 10월 달에 신한카드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것을 자율로 바꿨습니다. 2년밖에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그 시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영세업체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체들의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이용제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 같고요, 결국 수수료를 내린 부분은……

○**金容九 議員**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 계약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도 주고 길거리에 좌판을 깔아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카드대란을 겪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울 뻔했는데 지금 이 공동망제도는 카드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쟁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을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것 깊이 한번 짚어 보십시오.

저도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2년 동안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카드 행정을 맡은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질은 좋은 자질들이, 인재들이 모였는데 인사정책이 조금 가서 파악하려면 바뀌어 버리고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카드 전문업을 하는, 1980년도부터 30년 동안 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번 깊이 있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결국 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수수료 인하에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공동이용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수수료가 많이 또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이용 의무화가 의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효과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金容九 議員** 예, 제가 자신 있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나중에 뭐……

○**金容九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金容九 議員** 기획재정부장관님, 농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7년 1월 1일부터 20년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이게 중과를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농사짓다가 파는 시점에서 2년 동안 안 지으면 이게 인정을 못 받아서 중과를 하게 되니까 중과를 하면 세금이 한 60%가 되는 모양이고 지방세까지 하면 한 66% 이렇게 되니까 농지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땅을 사서 농사라도 짓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또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규제를 좀 한번 철폐할 수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지주 관계가…… 임야에서는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이 임야를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는 게 어 떤지 좀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지나 임야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세 제에서 중과를 하고 있는 것은 실수요자 중심으 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민으로부터, 비거주자로부터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부채지주 개념 이 중요한데요. 부채지주 개념의 판단 기준으로 중과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이나 투기 거래 수요를 차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반면에 지금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소위 전문용어로 동결 효과라 그 려까요,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도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 안에 대해서 현재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토지 수요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판 단을 해 보겠습니다.

○**金容九 議員** 예,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식경제부, 기획 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16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중소기업 문제라도 정책과 문제를 놓고 SSM 문제와 같이 부처 간 이견이 클 때가 많습 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정책과 문제를 책임지 고 협의·조정할 정부 내 조직과 기구가 없습니 다.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분리발주, 카드 수수료, SSM 모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중소기업 간 문제로 대기업의 무차별 진출 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에서 비롯된 것입 니다.

현 중소기업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 간 이견을 원활히 협의·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청을 사실상 조정 가능한 부처로 업그레이드시켜 야 합니다.

국회 내에도 중소기업대책특별위원회가 절대 필요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용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김용구 의원님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뼈가 굵으 신 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출신입니다.

박보환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민—경기도 화성 입니다—서른아홉 분이 방청을, 방문하고 계십니 다.

정범구 의원님 소개로 충북 음성군 대소중학교 학생 100명이 들어와 계신데, 원래 230명이 오셨 습니다. 그런데 자리 때문에 100명이 들어왔다 지금 교대 차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30명이 조금 있으면 자리를 채울 거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함 사건으로 순국하신 장병들과 고한주호 준위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빕니다.

이러한 천안함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난국을 틈타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이 고등학교·중학교 교과서 왜곡에 이어 마침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역사 왜곡과 거짓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와 동해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은 지도로 교육을 받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 독도 영유권을 포함한 미래 한일 관계의 앞날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입해 장기적으로 독도 침탈 의지를 더욱 드러낼 것이고 21세기 협력과 동반자 시대라는 말은 한낱 구호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계속되는 침략적 행위와 도발에 대해 제때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도발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시중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미지근한 외교를 했다, 또는 너무 차분한 외교를 했다고 하는 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나름대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 입장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결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

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일 양국 간 미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렇다면 2006년에 일본 새역사모임 교과서 채택본 사용 이후에 우리 정부는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같은 독도개발계획을 발표했는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2006년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는 4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독도경비대 숙소를 건립하고 GPS 상시 관측소 및 전망대 설치 등 9개 사업을 완료했고, 2008년 이후 자연 생태계 조사, 인공 어초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검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英娥 議員** 2008년 7월에도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독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는 2008년 7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기술에 대응해서 독도 생태조사·홍보 강화 및 시설물 설치 등 28개 독도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독도경비대 시설 보강 등 8개 사업은 완료했고 헬기장 확대, 어민 숙소 리모델링 등 대부분의 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이나 독도 방파제 설치 등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구역이며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 훼손 및 시설물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英娥 議員** 본 의원은 독도의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수

립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지금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화면에 보시면 총리께서도…… 동해에는 우리의 영해선과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선, 즉 2개의 서로 다른 국경선이 있습니다. 독도와 오키도 간의 중간선인 하늘색 우리 국경선은 중간수역 하단…… 중간수역 하단에 노란색이 짙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수역 하단에 한일 간에 합의된 기존 국경선과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현실적인 중간선인 데 비해서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서상의 소위 중간수역의 가장 왼쪽 라인과 일치하는 선, 즉 우리의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인 빨간색 영해선이 국경선이라고 줄곧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한일 간의 협정은 총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째 전혀 진전이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상에서의 2개의 서로 다른 영해선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은 1996년 이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그 획정 교섭을 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관련 국제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측 수역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양국이 똑같이 EEZ, 다시 말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출발점을 독도로 주장하고 있어서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朴英娥 議員**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실 독도를 분쟁 수역화하려는 일본의 도발과 의도를 저지한다면서 그동안 조용한 외교,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한 야망만 더 키우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독도 영유권과 무관한 어업협정일 뿐이라고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강변해 왔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어업에 관한 협정뿐이라는 신한일어업협정서상에서의 중간수역의 국제법적 성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해 개념입니까, 아니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대일본외교는 너무 느슨하다, 너무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만들고 또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룹니다. 어업협정이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원칙은 재판소의 판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소위 중간수역은 어업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한일 양국 간 EEZ가 합의되지 않아서 공동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수역입니다. 한일 양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英娥 議員** 정부의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독도 주변 수역에서 인공 어초 조성을 위한 강선을 침몰시킨다거나 해서 케이블을 매설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독도 영해 침범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독도 영유권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독도에 대한 그들만의 역사적 권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독도 영유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은 영토와 어업을 분리한다는 일본 측의 협상 논리에 휘둘린 EEZ협정 체결 때까지만 유효한 잠정적인 협정일 뿐입니다. 이 협정은 독도라는 우리의 영토 문제를 그 당시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덮어둔 불완전한 굴욕적 협정인 것입니다.

또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10월 방일에 맞추어 협상을 완료한다는 조급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체결된 졸속 협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영유권 논란과 일본의 도발을 촉진시키는 그야말로 매국적 협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저도 감정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박 의원님에 동감합니다만 현실은 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협정이 폐기되면 동해는 무협정 상태가 되어서 애로가 발생하고 오히려 우리 어업계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총리께서는 동해의 중간수역에서 잡히는 어획량이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에 비해서,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1%도 안 됩니다.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토 주권의 문제이자 역사 인식의 문제이며 또 해양 자원의 이용에 관한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명분과 이익도 독도 영유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전향적으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나라는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아랍에미리트공화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朴英娥 議員 전 세계에서 원전을 이렇게 설계부터 가동까지 원 스톱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까지는 미국·프랑스·캐나다·러시아·일본, 이렇게 다섯 나라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당하게 여섯 번째 나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렇다면 이번에 UAE 원전 수주의 규모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원전 수주 규모는 한 전하고 에미리트 원자력공사가 공식 발표하기로 한 공식 금액이 200억 달러입니다. 물론 여기는, 아까 오전 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물가상승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00억 달러고요.

또 UAE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짓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서 운영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 수명이 대강 60년 지속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운영·지원하고 기기 교체 또 정비 이런 것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200억 불이 수주가 가능한 그런 규모고요.

또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원전 도입한 지 한 50년 됩니다마는 순전히 우리의 기술로 자립해서 수출하는 그런 선진 기술력하고 원전 산업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물론 과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술한국'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격상시킨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렇다면 그 400억 달러 이상의 파급되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수출해서 거기에 따른 외화 가득이나 또 부가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장 연인원 11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규모는 저희들이 흔히 예를 드는 소나타 급, 한 2만 달러 정도 나갑니다마는 이것을 100만 대 수출한 효과와 똑같고요. 또 30만t 급 초대형 유조선 170척을 수출한 규모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렇다면 이번의 UAE 원전 수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원전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번의 UAE에 원전 수출 성사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핀란드 등등 여러 나라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터키하고는 원전 사업 협력 공동선언을 체결하는 등 기초 단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최종 원전 수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을 거쳐서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굉장히 너무 앞서가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불필요한 견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최근에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朴英娥 議員** 그래서 앞으로 원전 시장 수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되고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대략의 예측이 있으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2030년까지…… 지금까지 확정되거나 또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 약 430기의 신규 원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200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지금 6대, 여섯 번째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마는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 시장의 20% 마켓 셰어(market share)를 차지해서 한 80여 기를 추가로 수주하는 원전 강국이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원전 기술 자립도를 빨리 더 높인다든지 또 관련 인력 양성을 한다든지 또 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일부에서는 이번의 UAE 원전 수주 금액이 지나치게 저가라서 향후에 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오늘 오전에 강봉균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강 의원님이 제시한 숫자는 솔직히 저로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 숫자입니다마는 대체로 이번에 경쟁하다가 탈락한 프랑스의 ‘아레바’ 측이 국제 언론에 제시한 그런 논리를 아마 일방적으로 인용한, 외신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리에 신고리 3·4호기를, 똑같은 발전소를 지금 2기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게 건설 가격이 2기 짓는 데 약 5조 5000억으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기를 짓게 되면 11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朴英娥 議員** 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

게 되면 약 한 92억 불 정도가 됩니다, 4기 짓는데. 그런데 이번에 200억 불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형을 4기를 지었는데 약 2배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해외에 짓는 것과 국내에 짓는 것은 단가가 다릅니다. 원자재를 싣고 가야 되고 또 인력을 파견해야 되고 또 현지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내 것하고 단순 비교는 힘들다마는 계약 금액상으로는 2배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덤핑 수준이라는 말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적절한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적기에 납기를 댄다든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리스크, 또 환율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적절한 이윤을 남기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경제적인 그런 원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예, 통상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상도의상 맞는지 또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朴英娥 議員** 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UAE 측하고 한전 측이 계약하면서 이런 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원전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이 남긴다고 해도 문제고 또 손해 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朴英娥 議員** 예.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은 국제 상관례상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예, 앞으로 UAE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또 제2, 제3의 원전 수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이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식경제 R&D 혁신 방안을 내놓으셨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러면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신 현재의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미 여러 각도에서 여러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R&D 사업의 경쟁이 솔직히 그동안에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성과를 평가할 때 솔직히 온정주의가 만연해서 저희 과제 탈락률이 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잘했다는 얘기인데 온정주의 평가, 그다음에 또 실패를 불인정하는 그런 문화, 이런 등등의 굉장히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R&D의 성과가 낮다 하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대수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개선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전략기획단은 기업인 출신 CTO가 장관님과 함께 공동 단장을 맡게 되는데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朴英娥 議員** 이렇게 되면 또 정부의 R&D 지원이 혹시 원천기술보다는 기업의 제품 개발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서는 이렇게 하는 방향이 우리 정부 R&D 예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기본적으로 저도 공직에도 있어 보고 지금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R&D 환경을 공직자가 그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현장에서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서 저는 실제로 민간 R&D를 정말로 첨단, 세계적으로 해 본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기본적인 전략 같은 것을 하도록 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

해서는 저희 지식경제 R&D는 기본적으로는 상용화 또 산업화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기업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라는 출연연 또 대학 그다음에 심지어 국제기구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구해서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R&D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朴英娥 議員** 우리나라 R&D를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국과위 사무국이 교과부 소속이다 보니까 지경부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국가 과학기술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경부 전략기획단의 신설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R&D가 더욱 더 지경부·교과부로 분리되고 중복되거나 또 연계성 미흡이 더 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지적을 일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라는 저는 그런 걱정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 R&D하고 저희 지식경제 R&D는 기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교과부 R&D는 학교나 원천 이런 쪽으로 중점을, 기초, 이런 쪽으로 갑니다. 라는 저희들은 산업화와 산업원천기술, 이렇게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런 각도에서 시장의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국과위하고 충분히 잘 협조를 하고요.

또 큰 전반적인 부문 간 배분,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예, 국과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출연연구소 거버넌스 개편이 과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朴英娥 議員** 국과위 밑에다가 산업기술연구회

그리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소를 가지고 가서 국과위를 좀더 상설기구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출연연 거버넌스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우리가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게 거버넌스에 좋겠느냐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교과부 산하 쪽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 거버넌스는 분명히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구조가 돼야 된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서로 다른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 생각에는 정부의 R&D 전략은 지정부의 응용에 중점이 된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구와 응용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님을 청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국의 우수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朴英娥 議員** 그런데 세계은행과 IMD는 특히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유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D 두뇌유출지수가 2009년에 주요 57개국 중 48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

나라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국내에서의 연구 여건이나 처우 등에 대한 불만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朴英娥 議員**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수인재들이 교육과 연구 여건이 좋은 해외 대학에 빠져나가고 그들이 학위를 마치고 경쟁력을 갖춘 이후에도 돌아오는 귀국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심각한 위험신호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뭐 다른 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에서 본질적인 개선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부문에서는 우선, 연구나 교육 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응용 중심 또 단기 업적 중심에서 기초 중심 또 장기적 마인드에 기초를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흔히들 연구 하면 교육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 또한 중요함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에 대한 평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교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나 교육이나 마찬가지로 양적인 연구결과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예.

그와 관련해서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외적인 환경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또는 복수국적 문제 등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을 한국인이건 외국인인건 한국에 모시고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다닐 만한 학교가 있느냐’ 또 ‘아프면 갈 병원이 있느냐’입니다.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병원하고 학교가 잘 갖추어져야 외국 인재들이 올 텐데 그러자면 아주 장기적으로 봐 갖고서는 우리가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도 잘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외국인들한테까지 만족스럽게 되려면 저는 어떤 쇼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개방하고 의료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국적 포기 문제로 우수한 인재가 한국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예,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朴英娥 議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의무교육은 수업료가 가장 명시된 의무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업료 아닌 것으로서는 입학금이라든지 또 교재 이런 것에 대한 비용, 그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한 것 이것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러면 장관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 두 나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러면 이들 국가의 1인당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한 26.5%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45%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朴英娥 議員**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재정 여건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의 도입이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저희는 그런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급식이 스스로 가능한 그러한 계층까지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朴英娥 議員** 급식비 지원 가정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입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급식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朴英娥 議員**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래서 아침에도 그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방법이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2009년부터는 학부모를 통해서 학교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지금은 서비스센터지요, 거기에서 이것을 직접 다루도록 함으로써 학생들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議員**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짜 점심의 혜택만큼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장관님께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의 교육재정 여건상 가장 적합한 그리고 따뜻한 교육복지 정책을 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英娥 議員**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朴英娥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주권과 국력의 근간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입니다. 정부는 영토를 굳건히 지키고 인재를 키우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우리의 영유권을

훼손하고,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게 한 빌미를 제공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인접 국가에 침략적 의도를 키워나간다면 지난 20세기 역사가 증명하듯이 일본 자신 스스로 불행한 미래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국제 사회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여 국제 사회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결정적 기일로 삼는 것은 물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한일합방 100년, 8·15 독립 65년, 6·25전쟁 발발 6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세계의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힘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고, 그들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쳐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박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했어요, 박영아 의원?

○朴英娥 議員 죄송합니다.

○의장 김형오 잘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영아 의원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갑 지역구민 4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당 광주 북구를 김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실종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는 애당초 검찰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야당의 유력한 서울 시장 후보를 모욕 주고 흠집 내기 위해서 시작한

표적수사였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중립이고 법치입니까?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한명숙을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표적수사·막장수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이런 식의 정치 보복, 표적수사는 없어야 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무죄를 받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정치 보복, 표적수사를 벌인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총리, 다음 정권에서 총리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표적수사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직한 일입니까? 어떤 경우이든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 온 특단의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북한이 강경 조치를 선택한 배경에 천안함 북한 연계설이 작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한 의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북한의 강경 조치가 예고돼 왔으며 이번 북한의 조치와 천안함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천안함 북한 연계설과 이번 북한의 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두 가지 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지난달 31일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에 '천안함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긴급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김재균 의원 왜 보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국 기관에서 한국 경제 사정을 제대로 알고 평가할 때도 있지만 또 모르고 평가할 때도 있어서 우리 경제의 이른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서 우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반도에 군사적 불안이, 긴장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려 놓았던 전례로 보면 이번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김재균 의원 그런데 일부에서 계속 북한 연계 설을 흘리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어요.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일부 언론에서 이번 천안함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알려졌듯이 우리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적당하게 조사하면 죄지은 사람들 인정 안 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북 개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말입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발언에 좀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죄지은 사람을 북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죄지은 사람을 군대에서 혹시 잘못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철저히 과학적으로 조사하라고 말씀했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신 말씀이지 어느 한 주체를 겨냥하고 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라면 그때 가서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해도 늦지 않습니다.

총리에게 정부 당국자들의 신중한 발언과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다음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몰락을 재촉하는 SSM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마트 규제가 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트 규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어떤 설명도 없이 말만 180도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약과 말이 이렇게 조변석개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SSM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지경부, 외교부 또 중소기업 단체 등과 협의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 보호 또 국제규범과의 조화, 유통산업 발전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 중에서 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피해를 덜어주는 데 더 무게중심을 두고서 이 조율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M 규제 방안이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해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 방안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대통령의 말과 공약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총리실로 SSM 문제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해결이 좀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논의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감을 받습니다. 협상도 완전

히 중단된 상태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어제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접근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피해를 덜어 주는 데 무게중심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SSM이 계속 확장해 가지고 골목상권은 몰락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정부 태도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길거리에 나왔으라는 것과 같아요.

총리, WTO 서비스협정 위반 제소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지금 WTO 출범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협정 위반으로 인한 제소는 지금까지 단 5건입니다. 그나마 제소됐던 5건 가운데 명백한 위반은 2건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협정 제6조 국내 규정 조항을 위반해서 제소된 사례 들어 보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균 의원**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U 국가 중에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은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품목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어요.

협정 제4조에 따라서 주권국가라면 국내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가 있다면 우선 도입하고 통상법적인 문제는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한·EU FTA 협정을 맺고 나서, 그게 기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EU 쪽에 기준을,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해서 외교 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지금 걱정 때문에 SSM 규제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이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소상공인들은 지금 아주 엄중합니다, 위태롭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튼 결단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총리께서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희들은 행정부 쪽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지금까지 작년부터 이 문제가 논의가 전개돼 가지고 여야 간에 팽팽한 대립, 정부와의 대립, 갈등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지연시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체될수록 대기업의 SSM과 가맹점은 골목마다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계속 몰락의 위기에 놓여 있고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저와 의원님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1600세대에 1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전남 장성, 경남 함안, 충남 아산 등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대체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저보다는 아마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국토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리께서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만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순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사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지금 3조에 2만 채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또다시 건설사들에게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한 서민들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서 목숨 같은 임대보증금을 날리게 생겼는데도 정부에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제대로 된 친서민 실용정부인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친서민 실용정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이런 일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 2000만 원, 3000만 원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보증금이 지금 날아갈 판입니다.

그래서 총리께 요청드립니다.

대규모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에 공공 임대사업자의 부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주택기금 연체이자를 탕감하거나 경매 낙찰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총리가 되기 전에 2008년 11월 조선일보 시론에서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4

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균 의원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토건 산업을 통한 단기적인 성장을 높이기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토목 예산을 18.3% 줄이고 사회보장 예산은 9.8% 늘렸습니다. 일본 총리는 하는데 학자로서 평상시 토건 산업의 부작용을 얘기해 왔던 우리나라 총리는 정작 총리가 되어서는 왜 못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운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재균 의원 건설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국무총리 정운찬 4대강 사업에 토목이 안 끼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김재균 의원 대표적인 토건 산업이 4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본 의원이 대표적인 토건 산업인 4대강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인 무상급식 사업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무상급식으로 연간 7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가 발표될 경우 예상되는 정부 여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12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만 85만 6000명에 달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고용 효과 34만 명의 2.5배입니다. 물론 4대강 사업 고용 효과 34만 명은 허구입니다.

총리, 4대강 예산 삭감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복지 측면에서 훨씬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거기는 없습니다.

의원님, 세상에는 원하는 것은 무한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나라의 홍수 문제, 가뭄 문제 또 수질 문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재균 의원**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권의 중간평가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인류의 공통 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강을 가뭄과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조속히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연간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므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급적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므로 저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국민 설득도 없이 군대 식으로 밀어붙이면 5공 청문회 처럼 전직 대통령이 4대강 청문회에 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여됐다고 하는 것은, 다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치 법을 안 지키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4대강 청문회가 열리면 총리를 비롯한 이 자리의 국무위원들도 증인석에 서게 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경제수석 인사를 보면 청개구리

인사입니다. 서민 위기를 불러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최중경 대사는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이 정책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직도 거리에는 실업 당한 청년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을 다시 경제수석에 앉히는 것이 적절한 인사입니까?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만수, 최중경 경제라인을 복귀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서민경제 위기를 불러온 고환율·친재벌·친부자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가 아니라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아는 최중경 신임 경제수석은 금융에 조예가 있고 또 추진력이 강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재균 의원**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서민경제가 파탄 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쫓겨났던 강만수, 최중경 라인을 복귀시켰습니다. 서민경제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위기 그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진정한 친서민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예,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

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홍천·횡성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받는 정치인이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우리의 법원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더 이상 정치적 잣대로서 논의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황영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운찬입니다.

○황영철 의원 반갑습니다.

의원님들도 별로 안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의를 보니까 총리께서도 큰 고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국방부장관이 총리 역할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2008년 4월 하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철 의원 2008년 4월 9일입니다. 바로 2년 전 오늘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총리께서는 총리가 되신 이후에 의원님들의 방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뭐 총리로 임명받은 다음에 대표 방, 정당대표님 방도 가봤고 또 방 가본 적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기회가 나시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의원회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끔은 번개방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친화력을 좀더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제가 4월 9일을 굳이 여쭙 이유는 제 방이 409호입니다.

기회 되실 때 들려 주시면 따뜻하게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황영철 의원 예.

총리께서는 지난 3월 24일 모 언론사 주최로 비전코리아, ‘아그리젠토 코리아(Agrigento Korea)’라는 그런 ‘첨단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보고대회를 하는 행사에 참석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침에 갔다 다른 행사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황영철 의원 그러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제가 부득이하게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행사에서 축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취지는 농업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서 농업은 국방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미처 못 하고 내려왔습니다.

○황영철 의원 농식품부장관님 뒤에 앉아 계시지요? 제가 총리께 대표 질문을 합니다만 다시 농식품부장관님께서 세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신경 써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농업이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혁신적인 첨단산업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 하면 힘들고 뒤떨어지고 돈 안 되는 업종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자들은 나노와 우주기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 현실을 좀 볼까요?

농식품시장은 5.8조 달러 규모로 3.5조 달러의 IT와 1.6조 달러 규모의 자동차시장보다 큼니다. 10년 후 세계 식품시장은 6.4조에 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1997년 이후 모든 지표들이 악화되었고 2008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았고 농업 무역적자

는 188억 달러에 달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30년째 뒷걸음질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액 중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세계경제포럼의 2009·2010 농업 경제 효율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농업 정책 효율성은 96위로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만 농촌에 사람, 특히 생산적인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황영철 의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제시된 몇 가지 제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8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가진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통합해서 기업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농업리더를 육성하는 R&D 교육의 메카로 한국판 와게닝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너진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대형 임차농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자유전에서 경자유전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업은 우리의 뿌리이며 생명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산업이며 성장동력산업이라는 내용의 축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대회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럴 겨를이 아직 없었습니다.

○황영철 의원 너무 바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총리께서도 농촌을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아는 사람도 많고, 농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럼요, 물론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하면 약속은 지킵니다.

○황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이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첨단 R&D 수출산업,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농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우리 농업을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총리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감입니다.

○황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쌀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벼농사 위주의 농업구조하에서 쌀 수급의 적정성의 문제는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보고 쌀 소비 촉진 정책의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쌀 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14만~36만t의 잉여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에는 총 71만t을 정부가 매입해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양곡 재고는 128만t으로 적정 비축 규모인 72만t보다 56만t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수급 안정화 문제는 국가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선제적이지 못했고 뒷수습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쌀 관련 통계조차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통계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가공용 쌀의 소비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정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이 포함될 경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통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자세히 몰랐습니다.

○황영철 의원 모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쌀 수급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 온 쌀 작황 예상 조사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빗나가 정책 혼선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쌀 가격 정책으로 이어져 농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9월 15일 날을 기준으로 예상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실수확량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 정부의 쌀 가격 정책, 쌀 소비 정책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지난 예결을 통해서 지적했고 지금은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통계청에서도 쌀 예측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자, 총리께서는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주 좋아합니다.

○황영철 의원 아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술을 별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걸리병 몇 개를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지요.

(막걸리병을 들어 보이며)

세 가지의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진열하기가 힘들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병 중에서 어느 병에 들어 있는 막

걸리 값이 제일 비쌀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일 가운데가 제일 비쌀 것 같습니다.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까?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제일 큰 막걸리를 짚으실 줄 알았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지금 막걸리를 만드는 분들이 막걸리 소비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내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도 고치고 있습니다만 병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병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잘 알고 계십니까.

막걸리와 관련된 정책은 두 가지 트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를 정말 우리나라의 술로서 세계화시킬 것인가, 이 점에 동의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동의합니다.

○황영철 의원 두 번째는 막걸리 소비 촉진을 통해서 쌀 소비를 극대화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막걸리와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막걸리가 이렇게 우리 쌀 소비라든가 또 한식제와 관련된 우리의 주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들어서야 막걸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래서 정부가 쌀 소비를 권장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는 막걸리 소비를 권장한 이후 맥주라든지 양주의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황영철 의원 자, 제가 이 병을 보여 드린 이유 그대로 우리는 와인을 생각하면 와인의 대표적인 병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또 양주 하면 양주의 대표적인 병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걸리의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우리 막걸리를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느 병에 어떤 모양으로 담겨 있는지를 떠올리지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코 막걸리의 세계화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동감합니다. 막걸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막걸리는 술이라고 하는 산업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스며 있는 아주 소중한 전통문화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걸리를 세계화하고 또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화 문제, 품질관리 문제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철 의원** 또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와인을 만들어서 소개할 때 “이 프랑스의 와인은 칠레산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프랑스 와인이 아니지요.

○**황영철 의원** 아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황영철 의원** 한국산 막걸리가 한국산 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수입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황영철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막걸리의 약 8% 정도만이 국산 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논의조차 깊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막걸리를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세계화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현재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 파악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다음에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교육부장관님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소외된 지역, 계층 간·지역 간의 학력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 때 지역 균형 선발제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전국 지방곡곡에서 서울대학에 학생들이 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태서 계층별 계층 균형 선발제를 하려고 하다 그것은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만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아직도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계층 간의, 지역 간의 학력 격차는 역시 여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괴산 지역의 모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어촌 학부모들에게는 월 25만~30만 원의 기숙사비도 크게 부담된다고 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시도 교육청 지원 및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평균 기숙사비는 1개월 15만 원 정도로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외된 지역, 농어촌 지역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총리께서도 총리가 원하는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이 없는, 교육 불균형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황영철 의원** 교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장관님, 바로 1년 전 4월 10일입니다.

그때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 질의를 통해서 장관님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 지역의 학생들은 원정 수능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저도 지난해 11월 12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새벽에 버스를 타고 대도시로 가서 시험 보던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교를 들어갈 때 너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황영철 의원** 저는 최근에 EBS 수능 강의를 통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장관의 정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교육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하기도 참 힘들고 하는 상황에서 '사교육 대체효과가 제일 큰 것이 EBS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아주 좋은 교재도 개발하고 또 아주 훌륭한 교사들이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EBS에서 강의한 것이 수능시험에 많이 반영이 된다면 학생들이 구태여 학원 가지 않고도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보충하는 것을 EBS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EBS 강의, 그다음에 교재, 이 내용의 70%를 수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약간의 지엽적 문제점은 있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또 교육 격차가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이런 발표를 통해서 수능 교재의 매출은 대단히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 3월 달을 비교했을 때 수능 방송강의 수강 및 다운로드 수와 동시 접속자 수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장관께 제의합니다.

본 의원이 EBS 수능 교재를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들어가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황영철 의원** 준비된 질문이 많습시다만 시간이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시다만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이후에도 정치검찰의 이러한 무리한 기소가 한명숙 총리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기재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업들이 사실 매년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른바 규제 완화와 감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 완화와 감세를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또 약속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런 대기업들의 요구는 들어 주고 있습시다만 실제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를 보면 올 2월 기준으로 300인 넘는 기업의 경우에 188만 9000명으로 취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2월 193만 8000명에 비해서 약 4만 9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일자리가 17만 4000개가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일자리 만들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이 출총제 폐지와 감세 혜택만 받고는 사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고용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특히 증가하는 수출 실적 이

런 것 등에 비해서 고용 창출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대기업이 고용창출의 견인 역할을 해 주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수출 산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이 예년과는 달리 의존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는 제조업에서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 내지는 노동절약적으로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소위 성장이나 수출하는 것만큼 고용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대체를 하고 이래서, 고용이 성장하는 만큼 따라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출 산업과 내수산업의 균형을 취한다든지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대기업이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시면서도 산업구조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투자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업원 수 5000인 이상 대기업의 작년 투자 실적은 08년에 비해서 3조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기업이 당초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가 대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실적을 보면서 과연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투자 확대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자료를, 오늘 의원님의 본회의 질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해 가지고 통계는 제가 준비를 못해 나왔습니다.

○**조승수 의원** 정부 통계니까 신뢰하셔도 됩니

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준비해 나오지…… 통계를 가지고 답변 드리는 한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 고용 문제와 투자 활성화, 투자의 진작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금융성 자산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정부는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도. 적절한 투자 모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든지 예전하고 달라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기업이 합심을 해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결국 고용이 창출되고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기업의 역할과 사명에 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기업 이런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잘못하면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과실을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국민들의 인식에 비치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신에 대기업도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 역할을 해 온 점이라든지 현재도 치열한 글로벌 마켓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는 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승수 의원** 저는 장관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힘든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봐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 왜 유독 정부의 역할로서 국가의 역할로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들이 주요 선거 시기마다 왜 그렇게 지적되고 있는지는 중소기업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균형 발전만이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지금 우리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얼마입니까,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이십……

○조승수 의원 24.2%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승수 의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작년에 어떤 세율을 적용…… 최고 유효세율, 실제로 적용받은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특정 기업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승수 의원 11%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준 자료이니까 제가 왜곡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절반도 안 되는, 최고세율의 절반도 안 되는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투세 등 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순이익은 10조 8000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액 공제는 8005억을 받았고요. 2008년에는 세액 공제 금액이 무려 1조 382억입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고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투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시한 자료에 보면 당기 말 12조 4400억의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자료를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애로점은 정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논의됐느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면 지금 중소기업에게 주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기업이 크면 계속해서 회사를 여러 회사로 나누어서 분사를 시켜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리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중견기업이 되면 그럴 때도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그 정도로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여

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 고요.

지금 특정 기업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승수 의원 장관님, 좋습니다. 지금 특정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8일 날 증권거래소가 내놓은 ‘2009년 12월 결산법인 현금성 자산’ 자료를 보면……

자료화면 좀 띄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533곳의 현금성 자산은 13조 8000억 늘어난 84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특정 기업 얘기하는 것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니, 지금 특정 기업이 아니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현금성 자산이 한 100조가 넘고요, 금융성 자산까지 다하면 한 400~500조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유동화될 수 있는 자금들이 투자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 투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자료화면 2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에 10대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회사가 23%나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재벌의 이런 문어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제어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라든지 무분별한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시하신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재부장관께서 제가 구체적인 정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서 제가 총리께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이 대선 공약이 지켜 질 수 있는 공약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였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달성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또 그때도 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는 더욱더 산업 구조가 자본집약적으로 돼서 성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고용창출력이 아주 약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조승수 의원 일자리 관련 자료화면을 좀 띄어 주시면, 300만 개는 고사하고 주요 대기업들이 사실 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전경련에서 있었던 ‘300만 고용 창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묘하게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이 300만 일자리 숫자는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과연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역시 저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실천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에, 얼마나 고용 상황이 나쁘면 전경련 소속 기업들까지 나와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만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승수 의원 지난 국회 일자리특위에서 권태신 총리행정실장께서도 “이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라고 했고, 방금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공약 300만 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어렵다기보다는……

○조승수 의원 또 민간에서 출범한, 전경련에서 출범한 이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지켜보자는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경련 행사를 보면서 작년 이맘때 전경련이 벌인 이른바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 2월 25일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발표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대졸 초임을 최대 28%까지 삭감해서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진행도 되지 않은 가운데 비판적 여론이 있자 무마용으로 만든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판단을 달리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 결과 고용 사정이 너무 나쁘니까 기업들이 나서서 ‘우리가 좀 고용창출에 기여하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사기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벌여놓기만 하고 완성되지 않은 공사들이 많이 있다.”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수해서 자기들이 완공시키겠다, “그 완공시키는 과정에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목표가 달성 안 될지는 모르지만……

○조승수 의원 저도 그렇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선천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또 그 증거를, 왜 사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이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17개 기업에서 약 44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고용창출하겠다고 공약해서 안 됐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전경련이 주도해서 정부와 함께 고용창출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사기 아니고 뭘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대기업 옹호론자가 아닌 건 의원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고, 인정하십니까?

○조승수 의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는 제가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계속 동의하기 힘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대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각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결과 이 모든 기업들의 집합체가 자기들이 보니까 고용이 안 일어나니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기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했다고 해서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적인 자기극은 아닐 것 같은데요.

○**조승수 의원**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기재부장관께도 부자 감세가 왜 부자 감세인지를 제가 통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자료를 보지 않아서 내가 동의하기 힘들다” 그 말씀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와 대기업의 투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SSM 관련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가능한 한 규제방안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가능한 한 규제 방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실무자들의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치도 않은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중소기업 보호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세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보호와 함께 국제규범과의 조화, 유통산업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낼 테니까 그건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우리 지경부장관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SSM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강화된 등록제를 하시겠다고 한 지 몇 달째, 지금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이 생겨서 중소기업들이 단식농성까지 들어가자 총리실에서 부처 간 의견 조율하겠다고 지난 3월 24일 날 이렇게 자리 모아……

아, 2월 24일 자리 모아 놓고 한 달 반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일주일 안에 답을 내 놓겠다”고 해 놓고서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말씀도 계속 원론적인 답변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조승수 의원** 언제까지 그걸 제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제가 실무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속으십시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 내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지금 정부 의견이……

○**국무총리 정운찬** 속는 셈 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제가 속아서 이 문제가 풀린다면 제가 백 번이라도 속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300만 중소 유통사업자들은 더 이상, 속고 속아서 허탈한 마음 때문에 지금 절망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왜 조율되지 않는지 핵심 문제를 말씀드리면, 국제규범과의 문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WTO 서비스협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태까지 일관되게 “유통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수 의원** 아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승수 의원** 어떻게 아십니까? 그 내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유통시장에 관한 한 “전면 개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외국계 대형 유통점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매장에서 담배나 과자 그리고 유가공품 이런 부분들을 판매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것은…… 우리가 일부 민감한,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단 어떤 부분에 개방을 했

다고 한다면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수 의원** 그 신중이……

지경부장관님, 이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승수 의원** 없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논리가 외교통상부의 논리인데 우리가 서비스 협정을 통해서 개방한 것은 딱 두 줄입니다. 과일과 야채, 어류와 해산물입니다. 이것 외에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는 제한해도 사실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새롭게 확인한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개방경제 속에서 살고 한국 경제의 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마당에 과거 일본이 했듯이 개방한다 해 놓고서 적당한 개방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방한다 그랬으면 철저히 개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그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감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영업품목을 이것저것 많이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수 의원** 제가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승수 의원** 총리실 주관하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조율하겠다고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계속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얘기해 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품목 외에는 협정 사항으로만 본다면 제한을 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조차도 최근에야,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고 국회입법조사처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도대체 누구의 정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조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더욱더 개방에 신중하자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아주 신중하게 개방을 하되 일단 개방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저

런 방법으로 개방은 해 놓고 실제로 개방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방 경제 속에서 사는데 국제사회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승수 의원** 제가 이 질의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 주요한 내용들을 이미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제대로 좀 챙겨 보셔서 이번 입장 정리하는 데 외교통상부의 일방적 의견만 듣지 말라는 제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바로 일방적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벌써 여러 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보호의 측면을 제가 마음속에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승수 의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웹 브라우저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31일 날 총리실에서 다른 기존의 이른바 액티브엑스 외에, MSIE 외에도 다른 방식을 도입할 거라고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만 공인인증서라고 그런가요, 그건 마치 인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풀어 줘야 소비자로서도 좋고 또 IT 발달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걸 풀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조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조승수 의원** 금융위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이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 총리실이 마련한 방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이 도입을 하기로 하셨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늦어도 6월까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5월까지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정도의 어떤 안전성 수준이 어떤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작년 3월에 우리가 가입한 바젤 위원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바젤위원회에서도 전자금융을 할 때 세 가지의 어떤 보안성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객 인증이라든지 정보의 무결성, 거래에 대한 부인 방지,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를 했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공인인증서가 세 가지 기준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무화해서 시행을 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체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금융거래 쪽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오픈해서 그런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에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하면 다 열기로, 그렇게 해서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조승수 의원** 지금 외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비슷하게 하는 나라는 있습니다마는……

○**조승수 의원** 비슷하게가 아니고 똑같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액티브엑스(ActiveX)라는 것을 독점적으로 여태까지 사용을 하게 했고, 이번에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그와 유사한 방식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는 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서 약간 완화된 것 이상으로, 이것이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단지 사용상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보안업 등 해서 우리 IT산업 기반 전체에까지도 사실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이 부분은요, 조금 역사가 있는 일이고 지금 오늘 자세히 그것을 의원님과 다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인인증서만을 가지고 했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다양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개정할 것이 고요,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승수 의원** 대단히 미흡합니다. 좀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셔서 정말 사용자뿐만 아니라 IT산업의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제대로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알겠습니다.

교과부장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지금 대학원생은 제외돼 있는 것이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대학원생이 상환제 적용을 못 받도록 하실 것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현재 그렇게, 근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일반 전문가를 기르는 그런 기관이라면 대학원은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기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더욱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금을 이렇게 공여한다 할 때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상환 대출은 있는데 그것은 대학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승수 의원** 지금 우리나라 대학원생 숫자가 얼마인지 장관님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조승수 의원**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모든 전가를 풍선효과처럼 대학원에 각 대학들이 지금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교과부가 뭔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등록금에 관해서는 역시 최근에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에 있어야 하고, 그다음 등

록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학원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물가 상승률 1.5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그 규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대학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은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등록금 부분을 이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4대강 관련해서 지난 4월 6일 날 총리께서 “4대강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명운동이자 환경운동”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죽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계 역사상 기록될 만한 것이라고들 지리학자들이 그러합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요새 한 2, 3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는 강도 좀 좋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금수강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커다란 생각을,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반대하는 분들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난 40~50년 동안 우리가 빨리 성장하느라고 강을 비롯해서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서 현재 한국의 강들은 참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폐한 강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의 기후가 변화를 해서 가뭄이 언제 올지 홍수가 언제 올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또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 오랫동안의 경험을 보면 홍수가 한 번 나면 그 손해가 2.7조 원이다, 3조 원이다 하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4조 든다, 5조 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낙동강이나 영산강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수질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겨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또는 환경 파괴가 아니라 자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수 의원**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저는 4대강 관련해서 총리하고 저하고 철학의 차이인지 사실판단의 차이인지 4대강보다 훨씬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질의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자료화면이 뜨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4대강 관련한 사업이 이른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친환경 수질 개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강 곳곳이 심각하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헤치기 전의 그 강의 모습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의원님, 병원을 한번 가서 수술을 한다고 쳐 보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병을 고친 다음에는 뭐 멀쩡한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병을 고치기 전에, 예를 들어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수술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도 나고 또 살이 찢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단기에는 조금의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을 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에 대해서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저는 대운하와 4대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한 사실판단의 차이가 아니고,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총리님과 저는 4대강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김성희 의원의 소개로 경기 화성시갑 지역 지역구민 50인이 방청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會 議員**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화성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입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일제에 의해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기도 하였고 동족상잔이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기도 했으며 IMF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히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300년 만에 이루어 낸 민주주의 체제를 50년 만에 이루어 내었고 200년 만에 이루어 낸 산업화를 30년 만에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화의 문턱에 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로 뭉쳐서 이겨 나가는 지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안보를 튼실하게 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제의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도로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매년 홍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액과 그 복구 금액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

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좀 지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 7000억 원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연평균 4조 20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홍수예방투자비도 연간 1조 1000억을 투자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러면 그 돈이 결국 합치면 약 8조 원이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금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될 돈이 얼마나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14조……

○**金成會 議員** 금년도에 14조인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금년도에 한 8조 정도……

○**국무총리 정운찬** 아, 금년도요? 제가……

○**金成會 議員**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합해서 22조이고……

○**金成會 議員** 그래서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그 복구비 금액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 문제 또한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수질과 생태계 개선은 물론 홍수 예방과 물 부족 해소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여가, 수변공간의 창출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려는 아주 다목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成會 議員** 아까 존경하는 조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사

회의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와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이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사업이다—아까 존경하는 조승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그리고 보 설치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다,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습지가 훼손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일부 종교계와 몇몇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천주교, 불교 또 기독교 지도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저는 국토와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 저희들은 그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세상에 많이 좀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나 소통에 좀 게을렀다는 고백을 합니다.

○金成會 議員 잘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본 의원도 4대강 사업이 우리 국토와 강을 살리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특히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진정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종교계와 몇몇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데서 생겼다고 봅니다.

총리,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노력을 게을리 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점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성공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영상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4년 3월에 개장할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즉 USKR의 모습입니다. USKR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의 132만 평 부지에 만드는 복합 리조트 단지입니다. 금년 1월 19일에 미국의 UPR사의 토마스 윌리엄스 회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관련 기관들 15개 기관 대표들이 USKR 협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한번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던 같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USKR이 완공되면 10만 8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500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8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따지면 단지를 건설할 때 고용이 4만 2000명, 생산이 3조 4000억 원, 그다음에 운영할 때는 고용이 10만 8000명이고 생산이 8조 4000억 원 해서 그 둘만 합하더라도 고용이 15만 명, 생산이 11조 80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金成會 議員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이와 같이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할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외국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라는 것을 건립을 했는데,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선을 테마파크까지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조치를 정부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착수한 지 4년 만에 조기에 완성을토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USKR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는 우리 정부도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현재 USKR 건설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USKR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또 수자원공사죠, 이런 공공 부문하고 PFV 간에 사업기본협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USKR과 수자원공사 간의 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부지 가격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커서 지금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金成會 議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협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인, 땅 주인이 수자원공사 아니겠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봐서는 또 안 되고요. 또 그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도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이렇게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물론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송산그린시티 건설을 위해서 일부 철도와 도로망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는 언제 발표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게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USKR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공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또 이제 거기에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뭐 굉장하던데요. 조 단위씩……

○**金成會 議員** 지금 거기에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말이죠. 투입되는 돈은 8조 원이 들어가지만 약 3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어디 광역교통망……

○**金成會 議員** 예,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이러한 비용이 부지 가격 산정에 포함되어 있

어서 부지 공급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최초에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약 120만 원 정도를 요구하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협상이 되어서 조금 많이 다운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높아 가지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한 비용을 좀 지원해 줘서 부지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사업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뭐 얼마 지원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가격 낮추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방안의 하나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공이 현물로 토지를 출자하는 방안도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金成會 議員** 물론 이것이 제한되는 어떤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총리께 정부 부처 중심의 TF팀 구성을 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리께서 수용을 하셨는데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USKR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드리나 국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최대한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金成會 議員**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실무급으로 실장 한 분이 총리실에서 주축이 돼서 총리실의 세 분하고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지식경제부 이렇게 이제 팀 일부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실무팀으로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중심으로 경제부처의 장차관

급인 TF팀을 한시적으로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USKR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도 있고 또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현재 이게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金成會 議員 이것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물론 중심이 돼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업도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국내 기업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공급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정운찬 하여튼 실무진들이 아주 유능하고 또 그분들이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다 인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金成會 議員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토해양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8년에 부동산투기 억제와 땅값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지가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IMF 사태가 발생하자 98년 4월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예.

○金成會 議員 이처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경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다시 우리 경기도 지역의 많은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경기도 지역 내의 허가구역의 지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예.

○金成會 議員 그래서 그 결과 금년 말 현재 경기도 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3억 1000만 평, 전체 우리 경기도 면적의 42.8%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 면적으로는 7.1배나 되는 정말 엄청난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부동산의 투기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기업 희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달에 경기도의 어음부도율을 보니까 0.6%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 0.3%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기업이 어마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희생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사용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않고 부과금을 물더라도 토지를 지금 매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저희 지역인 화성에만도 이런 업체가 약 80개가 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중도위가 언제 열리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5월 중순쯤에 지금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예.

○金成會 議員 그것 논의하실 때에 가능하시면 국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전면적으로 해제를 하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

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좀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역민의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전면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 5월달에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 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은 있는데 아직도 미미한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살펴 가지고 기업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금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됩니다. 작년도도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조치를 하려고 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일부 어떤 제한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제한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일부라도 해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타임지는 1000년 역사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은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잘살아 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로 뭉쳐서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고승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님의 열정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제분야에 대한 연설을 들으면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비판은 사실에 근거를 뒤야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은 대표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돌입한 2008년 4분기 우리 경제에 회한한 일이 벌어졌다, 연율로 환산한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 마이너스 18.8%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님, 2008년 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기 대비 -4.5%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2008년도 4분기 성장률은 숫자는 부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최선이었습니다.

주요국 GDP 추이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과 미국, 유로화 지역, 일본의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 선진국들이 1% 미만 성장을 할 때 한국은 2배 넘는 성장률을 보여 주었고, 2009년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서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놀랍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추이는 상대적으로 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과거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민주당은 2008년도 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10%대 성장, 이것도 사실과 다름이다라는 회한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총리님,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5%보다 더, -5%보다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2008년도 하반기가 세계 경제의 회복기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는 달리 2009년도 1분기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9년도 1분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증시 지표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우존스 그래프를 보듯이 2009년도 초반까지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최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8년도 4분기가 세계 경제의 진정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틀린 말씀이었습니다.

○고승덕 의원 총리께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08년도 4분기 경기하강 원인이 글로벌 상황이 아니라 강만수 장관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도 하반기에 급등했다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2008년도 하반기 환율 상승이 정부의 의도적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글로벌 상황이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드멘털과 시장 수급이 반영이 됩니다. 먼저 경제 펀드멘털을 그 당시에 보면 2008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이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경상수지·자본수지 모두 국제수지에서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펀드멘털 자체가 나빠진 것이지요.

또 시장 수급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2008년도에 무려 46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해당하는 자본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에서도 수요 공급 면에서 공급이 턱없이 빠져 나가서 모자란 그런 형편이었고요, 펀드멘털도 나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에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환율이 급등한 것이었습니다.

○고승덕 의원 외국인 주식 순매도·매수 추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이머징마켓 중에서도 특히 한국 주식을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주었는지 계량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2009년도 화폐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화폐발행 증가율은 2009년도 4분기에 20.56%에 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 5만 원권 지폐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지폐를 들어 보이며)

이 돈이 언제부터 발행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작년 6월부터 아마 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고승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5만 원권 발행이 되면서 그 대신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그 돈을 마구 찍었기 때문에 화폐가 늘어난 것처럼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 화폐발행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5만 원권 지폐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5만 원권 발행이 통화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그렇습니다. 화폐 권중에 좌우되기보다는, 왜냐하면 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대출 상황, 또 민간의 화폐 수요 등 이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권이라는 고액권이 발행되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많이 대체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상 자기앞수표 발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를 않습니다.

○고승덕 의원 민주당은 또 고환율 때문에 2008년도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09년도라든가 그 이후 물가 변동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그래프를 한번 보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도가 지나자 생산자 물가는 급락하면서 모든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는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 급락, 또 그 전의 2008년 급등은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일 큰 원인은, 2008년과 2009년의 물가에 큰 변동이 일어난 것은 제일 큰 이유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2008년에 국제유가가 상당 폭 올랐다가 2009년에 안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환율도 두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측 요인의 변동에 주로 기인한 것이 2008년과 2009년의 물가 급등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승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연설은 이명박 정권은 최근에도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대금리 차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9년도 들어서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2009년부터 예대마진이 벌어진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2009년 들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 숫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부터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현재 예대마진이 한 2.7% 수준입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2.9%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위기 나고 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바로 하락이 되면서, 그러나 예금금리는 은행들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상당히 고금리로 수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3월, 6월 달에는 1.7%까지 수준이 내려가 가지고 은행들의 수익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7% 수준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예대마진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로는 글로벌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승덕 의원** 그러면 예대마진이 2009년도에 잠시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금융위원장 진동수** 없습니다.

**○고승덕 의원**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고승덕 의원** 다음, 예금 잔고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꾸준히 은행예금이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부동산시장도 부진하고 그런데, 예금이 꾸준히 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무래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또 많은 중산층들, 고소득층들이 펀드투자에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가 커져서 은행 쪽으로 많이 그동안에 예금이 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고승덕 의원** 국채-회사채 스프레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회사채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예대마진이 조금 벌어졌던 것은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좀 느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대출금리가 쉽게 수신금리만큼 안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대출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출금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전반적으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기준금리를 주로, 특히 주택담보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CD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CD가 기준금리로서 유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모양으로 보였고, 일부는 올라가는 모양으로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죽, 정무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까. 2008년 2월 달에 저희가 코픽스(COFIX)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그 도입 이후에는 대출금리가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예대마진 그래프를 2003년부터 크게 보면 조금 전 그래프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예대금리 차이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승덕 의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

으로 마치고 다시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금리수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금리 인상이 지연됐다, 안 됐다 하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지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민간 부문의 자생력 있는 회복세가 미흡하고 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타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가계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 가계자산이 대출 규모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예대마진 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는 저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에 대한 이자감소 효과가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감소 효과보다 커서 저금리가 소비 진작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 무슨 경제원론 시험문제 같은데……

○**고승덕 의원** 경제총리라고 제가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가계 전체로 볼 때는 아마 금융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또 고소득층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자들이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에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다음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90조……

○**국무총리 정운찬** 단지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

면 저소득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저소득층의 소비는 또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승덕 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제가 답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승덕 의원** 다음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90조 주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부 감세가 부자 감세이고 부자 감세 규모는 90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구호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90조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따져 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그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숫자는 2007년도를 기준연도로 잡아서 그 후 5년간 모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그리고 모든 조세 감면을 다 싸그리 합쳐서 90조 1000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90조가 전부 부자 감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그 90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일일이 항목별로 보니까 그중에는 2008년도에 지급한 유가환급금 2조 6000억, 일당 10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공제액 인상분 4400억, 인적공제 확대에 의한 것 또 자녀교육비 공제 확대·의료비 공제 확대 등 공제의 조정으로 인한 4조 3000억, 부가세 감소분 3조 7000억, R&D 준비금·중기 R&D 지출 세액 공제 확대 2조 5000억,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3조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살이 들여다보니까 부자 감세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조금 지적을 한다면 상속증여세 감세액 이게 5년 동안 520억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세수 감소 5조 3000억 이게 전부입니다. 위헌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부자 감세라 그러면 만약 민주당 시절에 위헌결정이 났더라면 민주당 정권에서 종부세 감세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고승덕 의원** 그렇다 그러면 부자 감세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또 90조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 29조 원, 법인세 34조 원 이게 모두 세율 인하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총리님,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도 국세 감면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그게 22조 원이고 2006년도 21조 원, 참여정부 시절에 수십조 원 국세감면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로 종합소득세율이 변화된 걸 따져 보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 소득세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4%, 노무현 정부 시절에 1% 등 5%가 깎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지금 2%를 낮추려고 하다가 부자 감세라고 공격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율 내리는 게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 정부야말로 부자 감세에 앞장선 셈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지 예를 들자면 소득세율이 내려가게 되면 부자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또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텐데 그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정도가 절대액으로 보자면 부자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면을 본다면 A정권에도 B정권에도 C정권에도,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모두 다 세율 인하로 해서 득보는 것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면 ‘맞구나, 부자 감세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논리는 전 정권에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부자 감세로 규정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같은 세율을…… 세율을 낮추면 절대액은 부자들이 득보는 것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고승덕 의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 많은 감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자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도 1월 당시 재정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처럼 그 당시 정부는 2002년도 세율을 내리고 2003년

도, 2005년도 세율을 또 낮췄습니다. 또 그 당시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OECD 인하 폭과 비슷한 세계적 추세라면서 법인세 인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추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인하한 것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하한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시절의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감세는 부자 감세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지적도 가능한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똑같은 생각입니다. 개인소득이건 법인소득이건 세율을 낮춰준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소득 쪽의 절대적 이득이 저소득 쪽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부자 감세를 했다면 과거에도 부자 감세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승덕 의원 조금 전까지 제가 죽 지적한 것처럼 항목별로 보나 세율인하 기간별 추이로 보나 부자 감세 90조라고 하는 그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총리님께서 이것과 달리 견해를 가지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꼭 서면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그다음에 조세부담률을 선진국과 비교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어떻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기 보입니다. 20.8%로 나와 있네요.

○고승덕 의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높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OECD를 가 보니까 세금 증가보다는 재정수요를 먼저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노후 차 교체 세제 지원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승덕 의원** 작년에 노후 차 교체 세제 지원.....

○**국무총리 정운찬** 아, 예.

○**고승덕 의원** 경기활성화 효과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실시한 노후 차 교체 세제 지원으로 38만 2000대의 노후 차가 신차로 교체 판매되지 않았습니까?

○**고승덕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연간 내수판매 139만 4000대의 27%고 전년 대비 20.7%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2009년 2/4분기의 전기 대비 GDP 증가율 2.3%p 중 0.8%p가 자동차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예.

세수 감면 액수를 따져 보니까 30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GDP 0.8% 증가는 약 8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3000억을 감세해서 8조 원의 GDP 증가 효과를 본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세가 무조건 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을 할 게 아니고 과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어떤 경제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 또 일회적인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또 다회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승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증현 장관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고용과 일자리 관련 질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예산안을 짤 때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그 대신에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과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배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전적으로 의원님 견해에 공감합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능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를 금년에 21개 교에서 2012년에는 50개 교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 1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더욱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11일 입적하신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짐을 덜어 주기는커녕 불안을, 또 불만을 잔뜩 안겨 주고 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절 바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민 각자가 지닌 사랑과 지혜와 덕성이 국력으로 다져진 그런 세상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바람이다.” 이 글은 스님께서 1986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정치가 달라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고승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35년 전 오늘 중앙정보부가 날조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 판결 17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독재 권력이 만든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2010년 4월 9일, 사법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질식시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과 감동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

다. 오늘 그 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은 또다시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반칙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광영욱 전 사장을 모질게 겁박하고 한편으로 빅딜 거래로 회유해서 거짓 진술을 쥐어짜 냈던 검찰이 이번엔 또 어떤 거짓 시나리오를 가지고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할지 몰라서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존경받는 야당 지도자를 정치검찰을 앞세워 어떻게든 죽이고 싶습니까?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을 총동원하려는 것입니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의혹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이 잡은 조폭 두목은 놔주고 권력의 주구노릇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재판정을 검찰 개그로 채우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입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고의 공정한 진상 조사를 위해 민간 주도의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낼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검사 임명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애 의원** ……

○**국무총리 정운찬** 특별검사 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김진애 의원**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재앙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와중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대강 재앙의 끝은 어디일까요?

천안함 사고와 4대강 사업의 공통점은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무능과 독선, 그리고 은폐와 홍보만 있습니다.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명박 정부는 포크레인과 크레인과 불도저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을 참다못해 종교계까지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 보았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여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 전국 사제단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건설업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니 땅만 보면 파헤치고 집만 보면 무너뜨리고 산만 보면 깎아 버리고 만다. 이제 생명의 젓줄인 강마저 끊어 버리려 한다.”

목사님들도 선언하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은 민중의 생활 터전과 생태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의심을 말살하고 있다.”

불교 조계종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국민적 합의, 적법한 절차,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은 국토와 환경을 파괴할 뿐이다. 이에 정부는 못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 일각수, 즉 뿔 하나 달린 짐승이 온 세상을 파헤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 보니 그 일각수는 포크레인이 아니냐? 정치인 몇몇이 신성한 국토를 자기 생각대로 파헤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지가 지난 3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 장막으로 포장하고 있다.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4대강 계획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선진국의 발전하는 하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교계 그리고 세계 과학계의 4대강 사업 비판이 홍보 부족 때문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진애 의원 종교계와 세계……

이것은 뻐 주십시오.

종교계와 세계 과학계의 4대강 사업 비판이 홍보 부족 때문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세계 과학계의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사이언스’에 나온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미국분 아닙니까? 저는 그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기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은 4대강 사업의 근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형이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생태나 환경을 중시하자고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4대강 사업도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홍보 부족을 탓하시자 총리를 비롯해서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도 어떤 다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사회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명할 때 좀 기술적으로 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술적인 질문이 왔으니까 기술적으로 대답을 했던 건데 사실은 좀더 생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태 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 여러 분을 만나 뵈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 지도자 분들을 몇 분 뵈고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사실은 지난 40여 년 동안 또는 50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만 하다가 산하가 좀 피폐했으니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심사 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진애 의원 총리께서 지난 4월 3일 낙동강 함안보에 가셨지요?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이 있던 날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날 제주도 4·3항쟁 위령제 참가도 빼먹으시고 4대강 사업 현장에 가실 생각이 홍보를 위해서였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그날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4·3 위령제에 갔다가 오는 길에 함안보하고 물금취수장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이 그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4·3 위령제는 내년에 다른 누가 가든지 간에 총리가 내년에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번 영결식에는 내년에 갈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총리실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해서 그 계획을 바꿨던 것이지 함안보는 워낙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빼먹고 간 게 아니라 영결식에 간 다음에 예정대로 갔던 것입니다.

○김진애 의원 바로 그 자리에서 “4대강이 완공되면 큰 어항이 된다. 큰 어항에서 물고기도 잘 자란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총리, 4대강 사업이 어항 만들기 사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했던 겁니다.

수질이라고 하는 것이 유량에 크게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낙동강에서는 물의 낙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가 커다란 데다 담아두게 되면 그것이 수질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 꼭 어항을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진애 의원 잠재의식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항 만들기가 아니라면 운하 사업입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대구에 가서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가 내륙이 아니라 이제 항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항구가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대구에 가서서 “대구 는 이제 더 이상 내륙이 아니라 항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구 사람들보고 내륙적 사고를

하지 말고 좀더 개방적 사고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4대강에 대한 여러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홍보에 나서셨으니까 충분히 해명해 보십시오. 첫째 의혹입니다.

대운하 사업이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갑했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14조 대운하 사업을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집권 후에 촛불집회가 뜨겁자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에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의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되는 6개월 동안 보 숫자가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보 높이가 3배 높아지고 준설량이 3배 늘어나고 예산이 14조에서 22조로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듯 조령터널 하나 빼고는 모두 다 대운하 계획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큰집이 운하 준비 사업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대운하 미련은 완전히 없습니다.

우선 글썽, 김 의원님께서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뽑아 놓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11월 27일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습니다. 또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대강 사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을 통해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 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 준비 사업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김진애 의원** 두 번째 의혹입니다. 22조나 되

는 사업이 어떻게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강행되느냐는 의혹입니다.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9년 초 이 법의 시행령을 바꿔 버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독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시행령까지 독단적으로 바뀌가며 밀어붙인 독선적 국정 운영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재해 예방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의 생태 하천과 자전거도로 등 나머지 사업은 이미 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기획재정부장관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재정부장관 부탁드립니다.

장관, 4대강 사업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받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나오지 못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김진애 의원** 액수로도 기억 못 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할 때는 48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서를…… 갑자기 나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22조 중에서 2.5조 원에 불과하고 146개 공구 중에서 불과 19개 공구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3000억 원 공사가 되는 15개 보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받는 공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왜, 뭐가 이렇게 긴급 사유가 있어서 예비타당성 면제받는 사업으로 지정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은 한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아니, 제가 여쭙어 보는 것은, 긴급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떤 근거에서 긴급 사유로 하셨는지를 제가 여쭙어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애 의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으로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10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4대강 일자리 몇 개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기억하기로 4대강 일자리를 하면……

○**김진애 의원** 아무리 자료를 봐도 아마, 안 나오는 모양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일자리가……

○**김진애 의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왜 일자리 파악 안 합니까? 일자리 장관 맞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3000억 공사하는 달성보 현장에 가니까 현재 170명 일한다고 합니다. 전체 146개 공구에 약 8000명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 질문 여쭙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 22조를 토목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 예컨대 첨단산업이나 지식서비스,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상식으로도 대답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따져서 여기서 비용을 뽑아서 일자리를 만든다 할 경우에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 또 공공 부문으로 가느냐, 민간 부문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애 의원** 아니, 그쪽 선에서 고용유발계수라는 것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러니까 산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진애 의원** 이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고용유발계수를 한 것은 토목이 14.1, 교육은 20.4, 사회복지는 무려 29.3입니다. 적어도 1.5배 차이 납니다. 게다가 토목은 공사만 없어지면 없어지는 일자리지요. 그런데 다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지요.

일자리 부문에 별로 관심 없다는 것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들어가 주십시오.

세 번째 의혹, 식수 오염 재앙을 감춘다는 의혹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함안보 공사장 등에서 여러 퇴적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 야당들의 조사에 의하면 중금속은 물론 독극물인 비소,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도 추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체 조사하고 있다, 문제없다, 퇴적토 오염 기준이 국내에 없다, 물에 희석되면 문제없다 하면서 지금도 그 오염토로 농경지 성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분석이 나왔다면 민관 합동 조사하고 조사 결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봅니다. 정부 자체 조사만 믿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퇴적토의…… 제가 지난번에, 함안인가요,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물금 취수장에도 갔습니다만 퇴적토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해 봤더니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비소 등 중금속 물질과 관련해서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는 중금속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취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설령 취수원수에 일부 중금속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정수 과정에서 제거되므로 식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기서 브리핑을 받았었습니다.

○**김진애 의원** 미국의 허드슨강은 약 20년에 걸쳐서 오염토를 제거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공사 중 오염을……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의원님……

○**김진애 의원** 오탁수 방지막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저걸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중으로 방지막을 쳐도 흙탕물 시커멓습니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올 2월이 되어서 오탉수 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흙탕물 다 만들어 놓고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허드슨강의 경우는 GE(General Electric)가 한 30년 동안 물을 흐려 놓은, 축전기인가요? 물을 흐려 놓은 경우고 지금 우리 4대강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오탉 방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탉 방지막은 하천 준설 시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탉 방지막을 통해서 흙탕물 농도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떤 수준 미만으로 관리할, 40mg인가 그것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홍수 시 농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식수 오염 우려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을 못 드렸습시다만 사이언스지에 나온 그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사일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야말로, 미국 교수 아니십니까? 미국이야말로 땅이 정말로 넓기 때문에 이리 가면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해서 자연 상태로 놔둘 정도의 땅의 여유가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애 의원 넷째 의혹입니다.

침수 재앙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마을 이장님이 호소하십니다. ‘강 한가운데에 물을 가들 줄은 차마 몰랐다, 평소에도 침수 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몰바다 될 것 아니냐?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말이나?’

낙동강 함안보는 한 달 전에 관리수위를 7.5m에서 5.5m로 2m 낮췄습니다. 작년 내내 정부는 침수 문제 없다고 버티다가 지역주민들하고 학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자 이제야 설게 바꾼 겁니다.

침수 문제가 4대강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연구되었는데도 마지막 사업 발표에서 내용이 빠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춘 적 없다고 국토부는 주장하기만 하고 지금도 자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침수

피해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뒤늦게라도 국토부에서 그것을 인정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6개 보 중, 제가 최근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16개 보 중 낙동강 함안보를 제외하고는 주변지역 침수는 없다고 분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바로 앞에서 죽산보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낙동강의 경우 함안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수위를 낮추어서 주변지역 지하수의 영향을 최소화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농경지를 성토하거나 배수시설을 확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승촌보하고 죽산보가 있지 않습니까? 승촌보는 주변 농경지가 관리수위보다 높아서 보 주변지역 침수 우려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죽산보는 관리수위보다 낮은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만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해서 배수 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진애 의원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홍수 재앙 불러온다는 의혹입니다.

총리께서 지난 2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리모형실험을 3월 말까지 끝내고 완벽하게 설계하고 공사하겠다고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모형실험 결과 중간결과도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약속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김진애 의원 본인이 한 말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벌써 2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보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실험은 2월 말에 끝났고 기타 보 운영과 관련된 실험은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월 말 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지금 의원님께서 수리모형실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진애 의원 수리모형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 수리모형.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이미 완료되었고 그 운영과 관련된 것도 4월 말에 완료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의원님이 2월 말까지 그것을 못 받으셨으면 의원님도 학자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은 이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 형식을 좀 맞추느라고 보고서가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또 거짓으로 하십니까? 제가 3월 말까지 중간결과 한 반도 못 받았습시다.

이제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말씀하십시오.

○**김진애 의원** 예,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화를 부른다고 며칠 전 발언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가 정확히 이 장관님의 말씀의 뜻을 유추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해한 것은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중단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이번 홍수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대비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보를 만드는 곳에 가물막이를 설치해 놔는데 가물막이가 바로 홍수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가물막이를 거의 대부분 철거를 하고 3개 정도는 높이를 낮추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준설물량을 우기 전에 가능한 많이 빼서 홍수소통능력을 높여서 해 가지고 어쨌든 4대강에 손을 대기 전보다도 홍수수위를 낮춰야만 이번 홍수에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철거를 하고 있고,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제가 점검을 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부분 철거하는 것은 5개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3개입니다, 정확히.

○**김진애 의원** 홍수기를 피하고자 했으면 우기 지난 후에 공사 시작하면 됐던 것 아니냐, 그동안에 수리모형실험도 철저히 최종 결과까지 반영해서 설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확정하고 그리고 공사 시작하면 됐을 걸 뭐가 그리 급해서 작년 12월에 한겨울에 공사 시작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사업이 그렇게 한가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하루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8개월만 늦었으면 됐을 걸 그랬네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왜 8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김진애 의원** 자,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진애 의원**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의혹입니다.

수자원공사에 8조에 달하는 15개 보 공사를 떠넘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재정으로堂堂하게 해야지 왜 공공기업을 동원하느냐, 공공기업 채권 늘려서 재정 부실하게 만들 이유 있느냐, 거기다가 이자비용 700억은 왜 국민세금으로 해주느냐, 국회 심의 안 받으려고 수공에 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수공이 대통령의 사기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간접자본, 즉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공기업 또는 민자 등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공은, 그 범조문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공은 8조 원을 부담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됩니다. 부채비율이 한 20%에서 한

백삼사십%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수공은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8조를 갖다 전부, 정부가 8조까지 낸다고 한다면 정부의 재정에 너무 압박이 있을 것 같아서 수자원공사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 대신에 당분간 금융비용은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나중에 주변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다가 좋은 사업을 벌이게 되면 수자원공사가 그 비용을 전부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애 의원** 그래서 다음 의혹입니다.

주변 개발권을 수공에 주려고 새로 법을 만든다는 의혹이지요.

앞서 질의한 백성운 의원, 지난 1월 달에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4대강 주변 2km 이내에 주거, 산업, 상업, 레저관광 개발 우선권을 수공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짹짹 맞춰서 전방위로 이 의원입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 주변 난개발 부추기려고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수공 8조 사업비 건져주려는 특혜사업, 나중에 수공이 터미널, 갑문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주변지역 땅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 살리기가 아니라 주변 개발해 먹으려고 4대강 사업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수구역특별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변지역이 난개발 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공공기관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개발이익을 민간한테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공공 부문이 환수하고 수공도 투자한 자금을 일부 보전키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민간 부문한테 다 맡겨 버린다면 그것이 난개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적인 국토관리하고 수공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여러 의혹이 많지만 마지막 하나

만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취수원은 바꾸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가셨을 때 함안보 다음에 물금취수장에 가서 부산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금취수장은 없어집니다. 진주 남강댐으로 취수원 바꾸는 것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어안이 병병합니다. 강물 깨끗하게 한다면 취수원은 왜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하 얘기 나오는 것 아닐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김 의원님,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부산……

○**김진애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 하십시오, 정확히!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무슨 딴 얘기 했습니까?

○**김진애 의원** 정확히 하십시오. 취수원을 왜 바꾸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낙동강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등을 위해서 하루에 2500만t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이 중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생활용수는 하루에 240만t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중·하류인 부산·경남의 경우 수질이 평균 3급수보다 낮다고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한 133만t은 보다 나은 취수원을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 검토가 4대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식수 외에 아까 말씀드린 공업·농업 또 하천유지용수 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적정 수준의 수질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란든지 이런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제가 그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물금취수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부산 사람들이 먹는 물을 정수장에,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김진애 의원** 매리취수장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

○**국무총리 정운찬** 예, 취수장이 2개인데 그다음에 또 정수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수장에 보내서…… 매리인가요? 매리하고 물금하고 두 취수장에서 보낸 물을 정수……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느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부산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물금취수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진애 의원** 여기 지금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취수장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진애 의원** 국민 여러분, 의혹이 풀리셨습니까? 정부의 말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을 지금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물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취수원은 왜 바뀐다? 생태 살린다면서 왜 모래밭, 습지 뒤엎습니까? 운하 아니라면서 왜 대통령은 대구가 항구가 된다고 합니까?

엉뚱하게 물 부족, 기후변화 운운하면서 물 가득 채워서 배 띄우려는 외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개발 조정해서 먹고 튀겠다는 속셈 외에 뭐가 보이십니까?

선진국은 이와 다릅니다. 보를 허물고 그리고 강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히 독일의 대도시 뮌헨에는 도시 한가운데에도 강을 재생해서 보를 철거하고 도시 속에 강을 만든 바 있습니다. 강이 시민 곁에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과 소통하려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법 절차를 다 밟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득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당의 의원이 하신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4대강 삽질을 멈춰라! 4대강 삽질을 멈춰라! 4대강 삽질을 멈춰라!

이것이, 국민 반대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예, 김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한 분 한 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 의원(242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진병헌	진여옥	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허천	허태열	현경병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76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승규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김금래	김부겸	김성식
김성태	김소남	김영록	김용구
김장수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태원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성린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백원우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양승조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낙연
이범래	이애주	이정선	이정희
이진복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정갑윤	정수성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조순형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최경환	최연희	최병국
최재성	최철국	허천	황우여

○속개 시 재석 의원(73인)

강길부	강명순	강창일	고홍길
권경석	김동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옥이	김용구	김장수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준선	박희태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희목	윤상일
윤상현	이경재	이두아	이애주
이윤성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해봉	임동규	임해규	장윤석
장제원	정몽준	정양석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문환	조승수
조진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허천	허태열	홍일표
황영철			

○산회 시 재석 의원(37인)

강명순	고승덕	구상찬	김진애
김춘진	김태원	문희상	박보환
박선영	박영아	박지원	박희태
배은희	서종표	양승조	우윤근
유일호	이두아	이애주	이용희
이정선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해봉	진현희	정범구	정장선
정해결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최영희	홍영표	홍재형	허천
황영철			

○청가 의원(17인)

강기정	김동철	김우남	성윤환
송광호	송영길	신건	유성엽
이철우	임영호	정옥임	조영택
주광덕	한선교	홍사덕	홍정욱
홍희덕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안병욱
의사국장	이종후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특임장관	주호영

## ○출석 정부위원

금융위원장	진동수
-------	-----

## 【보고사항】

## ○의안 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변웅전·송훈석·김낙성·백원우·손숙미·전현희·곽정숙·이재선·김용구·양승조·최영희·안홍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손범규·박보환·현기환·고홍길·홍사덕·김영선·임해규·박준선·김성수·정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양승조·김춘진·최철국·박은수·우윤근·박주선·김동철·최영희·강기정·최재성·백원우·변재일·전현희·김우남·김재균·곽정숙·조배숙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안홍준·유기준·이화수·유재중·이두아·홍정욱·이한성·이해봉·이혜훈·신영수·황우여·김기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8 정부 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손범규·송영선·이두아·박대해·김혜성·김태원·박보환·현기환·홍사덕·이성현·김영선·임해규·박준선·김성수·정미경·이명수·백성운·황우여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손숙미·조진래·김소남·김을동·서상기·김정권·김선동·원희목·유재중·김효재 의원 발의)

이상 5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조경태·이찬열·안민석·김재윤·양승조·김우남·백재현·이성남·송영선·김영록 의원 발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김영우·정해걸·김무성·이계진·권영진·이한성·김옥이·이성현·송훈석·이사철·안효대·김성수 의원 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김영우·유정현·이사철·안효대·김유정·원유철·김소남·김효재·정해걸·박대해·정갑윤·김성수·유성엽·이해봉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최영희·강기정·김성순·김영진·김재균·김춘진·박영선·박은수·송민순·이미경·이찬열·최인기·홍재형 의원 발의)

이상 2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이사철·조원진·조문환·고승덕·공성진·김낙성·최철국·강석호·송훈석·박주선·현경병·이계진·정해걸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오제세·강기정·조영택·김성곤·문학진·양승조·김재윤·박선숙·이명수·임영호·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오제세·강기정·조영택·김성곤·문학진·양승조·김재윤·박선숙·이명수·임영호·이인기 의원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韓國教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황영철·홍준표·김태원·김성수·

강기갑·박준선·이한성·신성범·여상규·유성엽·이계진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박영선·김동철·양승조·정동영·최영희·최문순·우윤근·박주선·조배숙·이성남·박지원 의원 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국회의원(서갑원) 징계안**

(2008. 12. 18 김정권·이은재·이종혁·정양석·이범래·김선동·황영철·박준선·최경환·장윤석·황진하·김기현·안홍준·나경원·김광림·나성린·고승덕·김성태·신성범·배은희 의원 발의)

**국회의원(이한구) 징계안**

(2008. 12. 16 원혜영 의원 외 82인 발의)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

(2008. 11. 12 주호영·김정권·이은재·이종혁·정양석·이범래·김선동·황영철·박준선·최경환·장윤석·황진하·김기현·안홍준·나경원·신지호·박민식·장제원·김성희·정옥임·구상찬 의원 발의)

**국회의원(이종걸) 징계안**

(2008. 10. 27 나경원 의원 외 21인 발의)

**국회의원(이은재) 징계안**

(2008. 10. 14 서갑원 의원 외 82인 발의)

**국회의원(정두언) 징계안**

(2008. 10. 13 서갑원 의원 외 82인 발의)

**국회의원(김용태) 징계안**

(2008. 8. 6 강기갑 의원 제출)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7건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0. 4. 6 손숙미·조진래·김소남·유재중·서상기·원희목·김을동·김정권·김선동·김효재·임두성 의원 발의)

4월 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2010. 4. 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302호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조경애 외

30만인으로부터 광정숙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전자투표 시범실시에 관한 질문서**

(2010. 4. 8 이정희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4. 8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